

KWDI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

박노욱 · 김동식 · 김호주 · 나세원

2012

연구보고서-8-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2 연구보고서 8-2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Ⅱ)」의 단위 연구보고서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

공동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 노 욱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 성과관리센터장)

공동연구자 : 김 동 식 (본원 연구위원)

김 효 주 (본원 연구위원)

나 세 원 (본원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요약

1. 서론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도화되어 국가재정법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각 부처는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서에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분석 대상인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성인지적 분석의 기본 내용은 사업수혜 및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임. 그러므로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들의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음
 - 성과지표의 경우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목표치 설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러한 성과정보의 부실로 말미암아 각 부처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어려운 형편임
-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개별 사업들의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의 지표 개발과 목표치 설정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자 함. 사업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산사업을 2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수혜 및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지표 개발 기준을 제시함. 그리고 기존의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 중 부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사례로 활용함
- 본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여 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이 성인지예산서에 담길 사업들의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성과정보를 의미있게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함

2.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과 문제점

-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를 점검하는 성과관리의 일환임
 -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됨
 -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성과목표 항목 하단에 목표치에 대한 산출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음
 -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기존의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성과지표 재설정이 가능하며 목표치는 '11년 실적치와 '12년 추정치를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음
-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성인지예산제도 양식 및 지침의 변화와 함께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과정보가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정도를 제대로 측정하고, 성과항목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 첫째, 성과지표 중 '여성수혜율' 지표가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순히 성별 비율을 반영하는 1차적인 수준에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 우선 성별영향분석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상 성별영향분석사업의 성과지표는 총 229개로 이들 중 190개(83.0%)가 '여성수혜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그 외 '여성수혜자 수', '남성수혜율', '남녀를 포함한 전체 수혜자 수'와 같이 수혜자의 성비 혹은 수로 설정한 성과지표까지 포함하면 202개(88.2%)임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양성평등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사업의 32개(36.8%)가 사업수혜율 및 사업수혜자 수를 성과지표로 작성하고 있음. 여기서 21개 사업은 성별영향분석사업과 마찬가지로 '여성수혜율' 혹은 '여성수혜자 수'로 작성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성과지표가 요구됨

- 둘째,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함
-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기반을 두고 궁극적으로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정되어야 함. 즉 사업목적 - 성평등 목표 - 성과지표는 일관성을 지녀야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개별 사업별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평등 목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는 성과지표를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결국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중장기적 양성평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반드시 사업목적 및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셋째,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관찰되고 있음
-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한 후에는 의욕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사전에 수립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2011년도 및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계속사업 중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목표치를 분석해 본 결과, 60개 정도의 사업들이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혹은 낮게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은 기타 관련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점임.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될 경우 성불평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 목표치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수혜 대상 모집단의 성비와 연관시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수혜 대상 모집단의 성비와 연관시켜 목표치를 설정할 때도 무조건 모집단의 성비가 이상적인 목표치가 되어야 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목표치이어야 할 것임
 - 더욱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는 수요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바람직한 수혜비율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려면 특정 사업이 처한 정책적 상황을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

- 본 연구에서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라는 정신에 근거하여 입안, 결정과정 등의 양성평등성보다는 사업수혜와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성인지적 관점의 성과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이 원칙은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예산사업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기본 원칙은 예산사업 수혜자의 양성평등성과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이라는 기준임. 이러한 큰 두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보다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검토할 수 있음
- 먼저,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의 기준은 세부적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수혜자의 성별 비율의 격차 여부와 수혜금액의 성별 격차 여부임. 수혜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모두 의미가 있는 지표임
 - 수혜자 수의 경우 단순히 수혜자의 성별 비율을 보는 것은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지표로서는 아주 초보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왜냐하면 사업의 수혜 대상자 자체의 성비가 고려되지 않고 일반인구의 성비를 기준으로 수혜자의 비율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평가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지표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경우와 같이 수혜 대상의 성비와 비교하여 수혜 대상자의 비율을 점검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만약 사업의 수혜 대상이 일반 국민 전체인 경우는 사업대상자의 성비 대비 사업수혜자의 성비와 일반 국민 성비 대비 사업수혜자의 성비가 동일할 것임. 하지만 사업대상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일 경우, 양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것임
- 사업대상자의 성비 대비 사업수혜자의 성비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한 지표는 사업에 대한 성별 수요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여 성별 수요 대비 사업수혜자의 비율을 점검하는 것임
 - 이러한 이상적인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원인이 내재적인 것인지, 환경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수요의 차이가 내재적인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수요 차이를 반영하여 사업의 수혜 정도를 차별화 시켜야 할 것임. 반면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 차이가 존재한다면 사업의 수요 차이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사업의 수요 차이 자체를 문제로 삼고 수정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 사업 수요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업에 따라 용이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므로 이상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음

□ 수혜자 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제 성별 수혜금액의 차이임

- 가장 단순한 지표는 성별 일인당 수혜금액의 차이임. 다만 일인당 수혜금액의 차이는 사업의 실제 성별 수요의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만 의미가 있는 지표임. 만약 사업의 성별 수요에 차이가 있다면 그 수요의 차이에 따라 일인당 수혜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일 것임
- 더구나 사업수혜의 귀착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며 일인당 수혜금액은 수혜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부의 보조금이 가장인 남자에게 지급되었을 경우, 보조금의 혜택은 직접 보조금을 받은 남자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미칠 수 있음. 그러므로 단순히 직접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의 성별을 파악하여 성별 일인당 수혜금액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실제적인 수혜의 성별 귀착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더욱 엄밀히 분석한다면 단순히 직접 전달되는 수혜금액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사업수혜자가 느끼는 수혜의 크기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사업수혜자의 수요 특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지원이라도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므로 사업대상의 수요 추정이나 조건부 가치추정(contingent valuation)의 방식을 활용해서 사업 혜택의 귀착 정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함. 다만 이러한 방식의 적용이 실제 상황(특히 모니터링 수준의 성과관리 수준)에서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출의 실제 금액이나 사업수혜 여부 정도의 단순한 지표가 활용되고 있음
- 그러므로 단순한 성별 일인당 수혜금액의 지표를 활용하더라도 지표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업의 상황별로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사업의 수혜자나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에 바탕을 둔 지표와 더불어 사업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차이도 부가적인 지표로 의미가 있음
 - 다만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표본 추출과 결과 해석에 있어서의 적절한 기준이 준수될 필요가 있음
 - 만족도 조사 결과, 특정 문제에 있어서 뚜렷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사업 계획이나 운영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음

- 이상의 세 가지 지표, 즉 사업수혜자 수의 비율, 수혜금액, 수혜자의 만족도는 일차적으로 사업의 수혜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없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업이 양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성인지적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것임
 - 사업수혜의 귀착의 크기를 성별로 엄밀히 분리해 낼 수 있고 이 귀착의 크기가 사업의 결과와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된다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사업수혜의 귀착 정도를 엄밀히 분석하기 어려우며 수혜 자체의 귀착이 바로 사업의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됨

〈표 1〉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기준

성인지적 성과지표	세분화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설정	해석 시 주의사항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사업수혜자 비율의 양성평등성	(사업수혜자 성비) ÷ (사업수혜 대상 모집단 성비)	베이스라인 목표치 = 1	사업수혜자 비율의 양성평등성 에 차이가 있을 경우 ① 자연적인 수요의 차이인지 ② 사회화로 인한 수요의 차이 인지 판단 필요
	사업수혜 금액의 양성평등성	성별 일인당 수혜금액 비율	베이스라인 목표치 = 1	성별 수혜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수혜금액 차이의 발생 원인 파악 필요 ① 수혜기준의 불평등 ② 사업 수요의 성별 차이인지 확인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사업수혜 결과의 양성평등성	사업의 성과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측정	베이스라인 목표치 = 1	사업결과의 성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 원인 파악 필요 사업방식이 특정 성에 유리한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 필요

4.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 ☐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유형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본 성과지표 개발 안에서는 일반 재정사업의 유형을 모두 망라하고자 함
- 성인지예산서 도입 초기인 현재로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기 용이한 대인 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서에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사업유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유형을 망라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 본 개발안에서는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일반재정사업 성과지표 사례집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2012a)에서 제시된 사업유형을 바탕

으로 성과지표를 각 사업유형별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자 함

□ 사업수단에 따른 23개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음

- 검사·인증·조사·연구, 교류·협력, 교육·훈련, 구매 사업, 구조개선, 기관운영 지원,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방지·예방·단속 사업, 보상금·보조금(인센티브 포함),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시설확충·개선, 신용·융자, 유통·마케팅, 인력양성·운영·활용, 자원유지보전, 정책 연구용역 및 연구사업, 종합 사업, 컨설팅 제공 및 지원,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행사, 행정집행, 홍보·방송, SOC 사업

□ 앞에서 제시된 사업유형별로 성인지적 성과지표 개발 시 주의점과 예시를 제시함. 사업 담당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을 사업수단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본 지침을 참고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지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본 절의 목적임. 다만 본 지침은 예시적인 것으로 실제 성과지표의 개발은 개별 사업의 범위와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성과지표 중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점검은 기본적으로 각 유형사업의 결과지표를 성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므로 각 유형사업의 결과지표는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일반재정사업 성과지표 사례집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2012a)을 참조하면 될 것임

□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및 사례는 <표 2>와 같음

〈표 2〉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및 사례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1	검사·인증·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따라서는 검사(심사), 인증, 조사, 연구에의 성별 참여 비율 파악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 추가적으로 사업 참여자나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차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의 활용도와 활용을 통한 결과의 성별 차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2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 참여자의 성비를 일차적인 지표로 활용할 필요 있음 - 협력사업의 수혜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지원 이루어진다면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점검 불필요함 - 사업참여자의 성별 만족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 활용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성격이 일회성 이벤트일 경우, 별도의 결과지표 설정 불필요함. 반복적인 성격의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할 경우, 결과지표 설정하고 결과지표의 성별 차이 점검할 필요 있음 	<p>교육과학기술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적인 지표: 사업 수혜자 성비, 수혜금액의 성비 ▪ 결과지표: 연구 결과물의 향상 정도의 성별 차이
3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 참여자의 성비를 일차적인 지표로 활용할 필요 있음 - 교육·훈련사업 수혜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혜금액의 양성평등성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 없음 -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 활용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통해 참여자들에게 가져오게 하는 변화 정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할 필요 있음 	<p>법무부 『교정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결과지표로는 교정교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 활용 가능함. 궁극적인 결과지표로서는 재범률의 성별 차이 점검하는 지표 활용 가능함
4	구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 사업이 아니므로 수혜자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어려움. 다만 구매물품 공급자의 성비를 사업수혜 지표로 활용할 여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결과지표로 구매 물품이나 장비의 사용자 만족도나 활용률의 성별 차이 점검을 활용할 수 있음. 궁극적 사업결과의 양성 	<p>국토해양부 『저상버스도입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를 받는 교통 약자 중 성비, 활용도나 만족도의 성별 차이 점검을 통해 사업결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평등성 점검은 대다수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과의 양성평등성 파악이 가능함
5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자체의 수혜자 양성 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곤란함. 다만 구조개선 사업 중 인력 감축, 조정 계획이 포함된 경우, 인력 감축 대상의 성비 점검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이나 분야가 사업의 단위이므로 사업 결과를 성별로 분리하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함 	현재 성인지에·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6	기관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개별 수혜자의 양성평등성 및 사업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의 점검 의미가 미약함 - 다만 양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음 - 기관이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기능 수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성별 차이나 만족도 차이 점검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적인 결과지표: 기관 이용자 만족도의 성별 차이 점검할 수 있음 - 궁극적인 결과지표: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성별 차이 점검할 수 있음 	<p>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수혜의 성별 비율, 교육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할 필요 있음
7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업수혜 양성평등성 점검이 비교적 용이함. 수혜자 성비,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점검이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적인 결과지표: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받은 수혜자의 만족도 성별 차이를 점검 - 궁극적인 결과지표: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점검 	<p>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수혜대상자를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노인계층, 도우미로 취업하고자 하는 계층으로 나누어 분명히 제시할 필요 있음.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과 사업수혜 결과의 양성평등성도 별도로 분리하여 점검해야 함
8	방지·예방·단속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혜자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용이할 수도 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지·예방·단속의 효과 보여주는 지표가 결과지표임 	<p>법무부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p>어려울 수도 있음. 수혜 금액의 성별 차이도 동일한 문제를 가짐</p> <p>- 사업의 효과가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착되는 것인지, 특정 지역, 집단, 국민전체에게 무차별적으로 귀착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p>	<p>-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사업에 따라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환경오염 예방사업 등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이 어려운 경우)</p>	<p>특정 성 차별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 미약함</p>
9	보상금·보조금 (인센티브 포함)	<p>-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해석에 주의 필요함. 사업수혜 대상자 파악 시, 사업수혜 조건에 부합하는 모집단 파악이 필수적임. 수혜금액의 경우 지급 금액의 결정 조건에 양성평등 저해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야 함</p>	<p>- 문제 해결 정도, 서비스 제공의 성별 차이 점검이 필요함. 보상금의 경우 보상금 수혜자 만족도의 성별 차이 점검이 필요함</p>	<p>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p> <p>▪ 위안부 피해자의 만족도는 일차적인 결과지표로서 의미는 있음.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수준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p>
10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p>- 사업수혜 양성평등성 해석에 주의 필요함. 사업수혜 대상자 파악 시, 사업수혜 조건에 부합하는 모집단 파악이 필수적임. 수혜금액의 경우 지급 금액의 결정 조건에 양성평등 저해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야 함</p>	<p>- 문제 해결 정도, 서비스 제공의 성별 차이 점검 필요함</p>	<p>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지급』</p> <p>▪ 노령연금이 고령인구의 성별 경제수준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 개발, 분석이 필요함</p>
11	시설확충·개선	<p>- 특정 개인, 집단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의 확충·개선 사업이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판단이 어려움</p> <p>- 그러나 시설 활용도, 시설 사용 편의성, 시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등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점검 가능함. 시설 활용도를 사업수혜로 본다면 시설 활</p>	<p>- 시설 이용도와 만족도의 성별 차이 점검 가능함</p> <p>- 교통사고 감소율과 같은 궁극적인 결과의 양성평등성 점검도 가능함</p> <p>- 하지만 불특정 다수 국민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궁극적 결과의 양성평등성 점검의 실익이 미약함</p>	<p>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p>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용도의 성별 차이 점검은 가능함. 그리고 시설 사용 만족도의 성별 차이도 점검 가능함		
12	신용·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혜택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판단이 비교적 용이함. 수혜자 성비,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점검이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또는 용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반영하는 적절한 결과지표가 개발되어 있고 성별 분리 통계가 있다면, 사업결과와 양성평등성 분석이 비교적 용이함 	<p>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 제공된 경우 직업 훈련 받은 참여자의 취업 성과의 성별 차이 점검이 필요함
13	유통·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용이함. 단, 가능한 지원 대상자의 성비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실제 지원 대상자들의 성비를 비교 분석 해야 함 -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지원 또는 시설이나 행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의 경우,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수출액 증대도모하는 사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익률 증가 성과가 기업주의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점검 가능함 -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사업내용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검증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성평등성 분석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p>현재 성인지에·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p>
14	인력양성·운영·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용이함. 단, 가능한 지원 대상자의 성비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실제 지원 대상자들의 성비를 비교 분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인력 양성하여 특정 업무, 분야에서 두각 드러내고 성과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성별 차이 점검이 필요함 	<p>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업수혜자 성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결과의 양성평등성에 대한 점검도 전혀 없음 ▪ 취업이 중요한 목표라면 취업 성과의 성별 차이 분석도 필요함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15	자원유지 보전 (문화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사업에서 성에 대해 중립적인 자원이 대부분이므로 수혜의 양성평등성 논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된 문화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나 활용도의 성별 차이 점검 가능하나, 특정 자원에 대한 성별 선호도가 다르지 않다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논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음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16	정책 연구용역 및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지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가능함 - 그러나 다수의 연구진에게 연구용역이 발주되거나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혜의 양성평등성 분석은 부적절할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연구진의 성별 차이 점검할 수는 있음 - 그러나 본 사업유형은 일정조건 하에 재정적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사업 방식, 서비스 내용 때문에 사업성과의 성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곤란함. 따라서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점검은 정책적 의의 미약함 	<p>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개발·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성비를 점검할 수 있음 ▪ 현행 지표를 통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를 전혀 판단할 수 없음. 지원 단체들이 창출한 콘텐츠의 수효와 활용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
17	종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 단위에는 적용 곤란한 유형임. 성인지예산서에는 세부사업 수준의 사업이 포함되므로 종합적인 사업수단이 포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 단위에는 적용 곤란한 유형임. 성인지예산서에는 세부사업 수준의 사업이 포함되므로 종합적인 사업수단이 포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18	컨설팅 제공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지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가능함 - 기업이나 가구 지원의 경우에도 기업주나 가구의 성을 기준으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태 개선(매출액, 수익성 등)이 기업주의 성별에 따라 차이 있는지 점검 가능함. 단, 기업, 기업주의 특성, 외부 경제적 요인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점검해야 함 	<p>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 경영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파악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실제 경영컨설팅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제시한 것인지, 농업 종사자 일만을 제시한 것인지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지 분명하지 않음 ▪ 사업결과에 대한 점검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9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지원 이루어지지 않고 통계자료 개발 및 작성 자체에 초점을 두므로 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어려움 - 다만 통계자료 생산 인력이나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성별 비율 점검할 여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물 활용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할 수는 있음. 그러나 통계자료의 경우 대부분 가치중립적이므로 양성평등성 분석의 의미 미약함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20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은 행사 참가자의 성비 점검을 통해 일차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자발적인 참가를 전제로 한 행사의 경우, 성비 분석의 의미 미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와 양성평등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음. 다만 행사 참가자 만족도의 성별 차이 점검은 가능함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21	행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성에 대해 집중하여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징수 실적, 체납자 비율의 성별 차이 점검함으로써 사업결과와 양성평등성에 대한 일차적 판단 가능함. 행정집행이 성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것이 사업 분석의 핵심임 	법무부 『보호관찰 활동』 ▪ 재범률은 보호관찰활동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바람직함. 다만 성별 재범률을 검토하여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점검 필요함
22	홍보·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측정이 곤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내용에 대한 인지도의 성별 차이, 홍보 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의 성별 차이 점검 가능함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23	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판단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점검을 통해 성별 만족도의 차이 점검 가능함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5.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개별 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함. 성인지예산서에는 일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사업수혜와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한다는 목적에서 본다면 일반 예산사업이나 여성정책 사업이 다를 것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여성정책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자체가 양성평등성 제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의 목적 자체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여성정책 추진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 일반재정 성과관리제도에서도 양성평등 자체를 정책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은 성과관리 대상으로 파악이 가능함
 - 그리고 여성정책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이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의미가 미약한 사업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일반 재정사업 분류에 관계없이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과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예산사업을 사업수단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의 결과지표 개발 원리와 사업수혜 및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 개발 원리를 논하였음
 - 동시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들의 목표치 설정 기준에 대해서도 논하였음. 사업수혜 양성평등성 관련 지표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는 사업대상 모집단의 성비일 것임. 즉 사업대상 모집단의 성비와 사업수혜자의 성비가 일치하는 것이 양성평등한 상태라고 가정하는 것임
- 이러한 기준이 되는 목표치에서 이탈했을 경우 그 이탈 이유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임. 이러한 기준 목표치에서의 이탈이 사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별 선호(수요)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지, 양성불평등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된 선호(수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임. 하지만

기준 목표치에서의 이탈이 기계적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임

-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는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기준은 성별로 사업결과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이 기준 목표치를 바탕으로 만약 이탈이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 론	1
II.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과 문제점	7
1. 성과지표 현황	9
2. 성과지표 문제점	10
III.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	17
IV.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27
1. 사업유형 분류	30
2.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32
가. 검사·인증·조사·연구 사업	40
나. 교류·협력 사업	42
다. 교육·훈련 사업	45
라. 구매 사업	48
마. 구조개선 사업	51
바. 기관운영 지원	53
사.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	56
아. 방지·예방·단속 사업	59
자. 보상금·보조금 사업	62
차.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	64
카. 시설확충·개선 사업	67
타. 신용·융자 사업	70
파. 유통·마케팅 사업	72

하. 인력양성·운영·활용 사업	74
거. 자원유지보전 사업	77
너. 정책 연구용역 사업	79
더. 종합 사업	82
러.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	83
머.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	86
버. 행사 사업	88
서. 행정집행 사업	90
어. 홍보·방송 사업	92
저. SOC 사업	94
 V. 결 론	 97
 ■ 참고문헌	 107

표 목 차

<표 II-1> 성별영향분석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유형별 현황	11
<표 II-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유형별 현황	12
<표 II-3> 사업목적, 성평등 목표 및 성과지표 연계 미흡 사업 예시	14
<표 II-4> 성과지표 목표치의 문제점 예시	15
<표 III-1> 단계별 성과지표 예시	19
<표 III-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기준	24
<표 IV-1> 사업유형별 23개 분류기준 및 개념	30
<표 IV-2>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32
<표 V-1>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및 사례	100

그 림 목 차

[그림 IV-1]	검사·인증·조사·연구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40
[그림 IV-2]	교류·협력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43
[그림 IV-3]	교육·훈련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46
[그림 IV-4]	구매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49
[그림 IV-5]	구조개선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52
[그림 IV-6]	기관운영 지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54
[그림 IV-7]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	57
[그림 IV-8]	방지·예방·단속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60
[그림 IV-9]	보상금·보조금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63
[그림 IV-10]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65
[그림 IV-11]	시설확충·개선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68
[그림 IV-12]	신용·융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70
[그림 IV-13]	유통·마케팅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73
[그림 IV-14]	인력양성·운영·활용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75
[그림 IV-15]	자원유지보전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78
[그림 IV-16]	정책 연구용역·연구사업 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80
[그림 IV-17]	종합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83
[그림 IV-18]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84
[그림 IV-19]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87
[그림 IV-20]	행사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89
[그림 IV-21]	행정집행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90
[그림 IV-22]	홍보·방송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93
[그림 IV-23]	SOC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95

I

서 론

성인지예산(Gender Budget)은 국가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성인지 예산은 구체적으로 특정 성(specific gender)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사업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을 양적으로 확장하고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적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인지예산을 논할 때 정부의 예산이 양성평등적 영향을 가져오도록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와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점검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의 예산이 양성평등적 영향을 가져오도록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적 사회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양성평등(gender equity)이란 여성과 남성이 양적으로 동일한 예산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의 수요를 잘 반영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양성평등지수와 경제성장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Stotsky, 2006)는 우리에게 양성평등적 예산이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¹⁾. 한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점차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예산사업을 통해 양성평등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이 불평등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성간의 불평등이 존재할 때 사회 구성원은 불편해하며 행복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논거에 의하면 정부 예산을 통해 양성간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회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음으로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

1)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결정적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Stotsky(2006)의 연구 결과는 상관관계를 보여 줄 뿐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4 ●●●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

보고자 한다.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경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부의 예산지출이 의도하지 않게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기존의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자들은 외부성을 정부 개입의 주요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양성평등이 주는 혜택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며 개인이 그 혜택을 배타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적정 수준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일반 예산사업이 의도하지 않게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리하는 행정비용이 편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약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²⁾.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성인지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의 양성평등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으며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인지예산에 관한 행동강령이 채택된 후 확산되고 있다. 대체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초기 접근은 시민사회의 요구 혹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되었다. 현재는 유엔여성기금(UNIFEM)과 국제개발연구센터(IRDC)와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성인지예산에 관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에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여성운동단체(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연합,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예산운동의 일환으로 성인지예산 개념이 공론화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2006년 성인지예산제도와

2) 일반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유형을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성별영향분석사업이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에 해당되며 성별영향분석사업은 여정사업을 제외한 일반 예산사업들로 후자에 해당된다(이하 ‘성별영향분석사업’으로 작성하였음. 다만 현재 부분에서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예산사업’으로 작성하였음).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구체적으로 2006년 9월 8일에 『국가재정법』이 통과되어 동년 10월 4일에 공포되었고 2007년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 지침에 성인지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후 2009년 처음으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으며 올해는 네 번째 예산서인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예산편성, 집행, 평가 및 환류와 같은 일련의 예산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모니터링 수준에서의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모니터링 목적의 성과관리제도란 소수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예산사업의 성과에 대해 빠른 시간에 체계적으로 환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일종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일차적인 성과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약 이러한 성과정보가 부실하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성과정보를 성인지예산서에 담기 위해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부터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각 사업마다 설정하도록 양식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부터는 성과지표 항목 아래 목표치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작성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문제점을 토대로 성과지표의 개선 및 개발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수혜의 양성평등성과 결과의 양성평등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지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수혜의 양성평등성은 예산 지출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정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수혜자와 수혜금액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반면 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사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성을 의미하므로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성과지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서 사업유형

6 ●●●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

별로 성과지표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유형은 사업수단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성과지표 개발 원리와 예시 지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업유형별 성과지표의 예시를 활용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의 효과가 향상된다면 그것이 바로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II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과 문제점

1. 성과지표 현황	9
2. 성과지표 문제점	10

1.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는 개별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새롭게 추가된 작성항목이다.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성과목표 항목 하단에 목표치에 대한 산출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기존의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성과지표 재설정이 가능하며, 목표치는 '11년 실적치와 '12년 추정치를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성인지예산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는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해당 사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양질의 평가척도라 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일차적인 성과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평등 목표의 달성 정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성과지표 작성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과정보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작성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예컨대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에는 총 268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20개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1개 사업에서는 목표치도 누락되었다. 그러나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316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작성된 사업은 1개 사업뿐이다³⁾. 이와 같이 지난 2년간 성과지표 미작성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성과지표 미작성은 성과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성과지표의 연속성은 성과지표를 통해 지속적

3) 성과지표는 필요 시 1개 이상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사업 수보다 작성된 성과지표의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변경되거나 해당연도의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성과지표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2011년도 및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대상사업 중 20%는 성과지표가 변경되었다. 즉 두 기간의 성과지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과지표의 연속성은 성과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연속성 부재는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성인지예산사업들이 해당 사업의 성평등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성별 비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어,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평등 목표나 기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경우 성과지표가 성평등 목표의 달성 정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어 성과항목 자체의 실효성이 낮아져 의미 있는 성과정보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성과지표의 설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김영숙 외(2011) 및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1)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어 목표치 달성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며 목표치의 산출근거 역시 불분명하다. 또한 목표치를 단순히 남성과 여성 비율 50대 50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작성되어온 과정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성과지표 문제점

첫 번째는 성과지표 중 ‘여성수혜율’ 지표가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순히 성별 비율을 반영하는 1차적인 수준에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우선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사업을 살펴보면 총 229개 성과지표 중 190개(83.0%) 성과지표가 ‘여성수혜율’이다. 이외 ‘여성수혜자 수’, ‘남성수혜율’, ‘남녀를 포함한 전체 수혜자 수’ 등과 같이 수혜자의 성비 혹은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관련 사업을 포함하면 총 202개(88.2%)에 이른다.

〈표 II-1〉 성별영향분석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유형별 현황

여성수혜율	여성수혜자 수	남성수혜율	남녀 수혜자 수	기타	합계
190개 (83.0%)	5개 (2.2%)	4개 (1.7%)	3개 (1.3%)	27개 (11.8%)	229개 (100.0%)

- 주: 1)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사업의 성과지표 유형별 현황임.
 2) 사업별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어 전체 대상사업 수와 다를 수 있음.
 3) ‘기타’ 성과지표에는 ‘만족도’, ‘재범률’, ‘일자리 수’, ‘교육실시 횟수’ 등이 포함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이하 ‘여정사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들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양성평등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의 32개(36.8%)가 사업수혜율 및 사업수혜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성과지표 중 21개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사업과 마찬가지로 ‘여성수혜율’ 혹은 ‘여성수혜자 수’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좀 더 다양한 성과지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수혜율 지표는 성인지예산사업의 수혜 비중을 대표하는 지표로서의 일차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성과지표는 성인지예산사업 수행결과의 양성평등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혜의 양성평등성이 곧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과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과 더불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이 연계된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12 ●●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

〈표 II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유형별 현황

사업수혜율 및 사업수혜자 수	기타	합계
32개 (36.8%)	55개 (63.2%)	87개 (100.0%)

- 주: 1)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사업 중 여성사업의 성과지표 유형별 현황임.
 2) 사업별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어 전체 대상사업 수와 다를 수 있음.
 3) ‘기타’ 성과지표에는 ‘만족도’, ‘재입소율’, ‘사회복귀율’, ‘취업률’ 등이 포함됨.

두 번째는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기반을 두고 궁극적으로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사업목적 - 성평등 목표 - 성과지표는 일관성을 지녀야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개별 사업별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평등 목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국격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자, 성평등 목표는 여성인력 활용으로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전문 여성인력의 능력개발을 성평등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과지표는 우수한 여성인력 활용 및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의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수형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유도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권익 보호 및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성평등 목표로 세움으로써 직업훈련을 통한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과지표는 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이다. 이상의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사업으로 개별 사업이 지닌 사업의 목적과 성평등 목표를 통하여 기대하는 성평등 효과를 달성하였는지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는 기존의 성과지표보다는 여성 선발비율이 더 적절하며 후자는 여성

취업률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즉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테면 국방부의 ‘국방여성정책 홍보물제작’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은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국방여성의 공감대 형성과 복무의욕 고취이다. 성평등 목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로서 남녀가 함께 하는 군인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잡고 있다. 그렇지만 성과지표는 국방여성정책 홍보물 배포부수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 사업의 내용은 국방여성(여군, 여군무원, 여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동일 직종의 남성들과의 성평등한 군 환경 조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혜자인 여성의 복무의욕 개선도 혹은 만족도 등과 같은 성과지표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서도 성과지표 연계성 부재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양성평등 가치가 문화분야 전반에 정착되도록 관련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여 여성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다양성 증진을 성평등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양성평등 문화활동 사업지원 개소수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성인지적 문화 확산을 가져오는데 있어 중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원 그 자체가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분야별 여성 예술인 (지원)비용이나 지원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홍보에 따른 일반 남녀의 인지도 등 예술이라는 문화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혜자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여부를, 장기적으로는 사업이 추구해야 하는 성평등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는 성과지표를 성평등 목표와 연계

14 ●●●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

하여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중장기적 양성평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반드시 사업목적 및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3〉 사업목적, 성평등 목표 및 성과지표 연계 미흡 사업 예시

부처명	사업명	사업목적	성평등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지표
외교 통상부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우리나라의 국제경 쟁을 위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여성인력활용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전문 여성인력 능력 개발	우수한 여성인력 활용 및 청년여 성의 경력개발 지원
법무부	직업훈련	수형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 시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유도	여성권익 보호 및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직업훈련을 통한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	작업 및 직업훈련 참여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
국방부	기타정책사업 - 국방여성정책 홍보물제작 -	홍보영상물 제작으 로 국방여성의 공감 대 형성과 복무의욕 고취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남녀가 함께 하는 군인문화 조성	국방 여성정책 홍보물 배포부수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개발 - 양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 -	양성평등 가치가 문화분야 전반에 정착되도록 관련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다양성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활동 사업지원 개소수

주: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일부 내용을 발취하여 재구성한 것임.

세 번째로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관찰되고 있다.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한 후에는 의욕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사전에 수립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1년도 및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계속사업 중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목표치를 분석해 본 결과, 60개 정도의 사업들이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혹은 낮게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타 관련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될 경우 성불평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향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먼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상담요원운영 인건비’ 사업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의 목표치가 동일하게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동반자사업(ODA)’, 환경부의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온실가스 전문인력양성)’, 그리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사업들의 경우는 전년대비 목표치가 오히려 낮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사업(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교육)’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상의 목표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순히 목표치를 성비 불균형을 맞추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목표치 작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목표치 설정기준이 불분명하며 목표치 작성에 있어 노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표 Ⅱ-4〉 성과지표 목표치의 문제점 예시

부처명	사업명	성과지표	'11년 목표치	'12년 목표치	분석내용
기획재정부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사업 - 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 교육 -	소비자교육 실시 이민자 수	성인지예산서 (6,500명) 성인지결산서 (3,900명)	4,800명	'11년 성인지예·결산서 상의 목표치 불일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상담요원운영 인건비	남성상담원 채용비율	2%	2%	목표치 동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동반자사업(ODA)	여성지원비율	50%	25%	목표치 낮게 설정
환경부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지원 사업 - 온실가스 전문인력양성 -	여성수혜율	45%	34.05%	목표치 낮게 설정
문화재청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여성채용비율	25%	5%	목표치 낮게 설정

자료: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일반적으로 목표치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수혜 대상 모집단의 성비와 연관시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혜 대상 모집단의 성비와 연관시켜 목표치를 설정할 때도 무조건 모집단의 성비가 이상적인 목표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목표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목표치일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욱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는 수요 자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사업에 대한 수요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성차별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라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특정 성에 더욱 집중적으로 사업수혜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바람직한 수혜비율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려면 특정 사업이 처한 정책적 상황을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인지예·결산서에는 이러한 분석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업수혜의 양성평등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쟁점이 존재함에 비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 목표치는 오히려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 사업결과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업 여건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적 결과를 추구하되 단기적으로는 점진적 개선을 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결과의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치가 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목표치 문제는 성과지표가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에 준하여 작성되었는지, 혹은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

기획재정부 외(2012b)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된다. 투입지표는 사업추진에 투입된 자원과 인력, 기타의 자원을 나타내며 과정지표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낸다. 투입지표와 과정지표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성과지표라면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는 사업완료 이후에 해당되는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출지표가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결과지표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 단계별 성과지표 예시

단계별 성과지표	내용 및 설정 예시 (직업훈련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특성
투입(input)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에 투입된 자원과 인력, 기타의 자원을 나타냄 (예시) $\text{예산 집행률(\%)} = (\text{예산집행액} / \text{예산확보액}) \times 100$, 투입인원(명), 투입시간(시간)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process)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냄 (예시) $\text{훈련학교 건설 공정률(\%)} = (\text{당해 연도까지 집행건설비 누계액} / \text{전체 훈련학교 건설비 총액}) \times 100$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output)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을 나타냄 (예시) 직업훈련 수료자 수(명) 	사업이 의도한 1차적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점검하는데 도움
결과(outcome)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냄 (예시) $\text{직업훈련 참가자 취업률(\%)} = (\text{취업자} / \text{수료자}) \times 100$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2012b)

일반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경우 여정사업을 제외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별도의 투입이나 진행과정이 없기 때문에 <표 III-1>의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라는 정신에 근거하여 입안, 결정과정 등의 양성평등성보다는 사업수혜와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성인지적 관점의 성과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예산사업의 양성평등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논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기준을 검토하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성별영향평가의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정책 수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성과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게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은 정책 수혜자의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하여 형평한지, 예산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편차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책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한지에 대해 점검하게 되어 있다.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은 정책의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점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지표는 예산사업 수혜자의 양성평등성과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예산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큰 두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보다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의 기준은 세부적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수혜자의 성별 비율 격차 여부와 수혜금액의 성별 격차 여부이다. 수혜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모두 의미가 있는 지표이다. 그러나 수혜자 수에 있어 단순히 수혜자의 성별 비율을 보는 것은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지표로서는 아주 초보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자 자체의 성비가 고려되지 않고 일반 인구의 성비를 기준으로 수혜자의 비율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평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지표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경우와 같이 사업대상자의 성비와 비교하여 사업수혜자

의 비율을 점검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대상자가 일반 국민 전체인 경우는 사업대상자의 성비 대비 사업수혜자의 성비와 일반 국민 성비 대비 사업수혜자의 성비가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대상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일 경우, 양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것이다.

사업대상자의 성비 대비 사업수혜자의 성비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한 지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업에 대한 성별 수요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성별 수요 대비 사업수혜자의 비율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원인이 내재적인 것인지, 환경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수요의 차이가 내재적인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수요 차이를 반영하여 사업의 수혜 정도를 차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 차이가 존재한다면 사업의 수요 차이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사업의 수요 차이 자체를 문제로 삼고 수정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업 수요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업에 따라 용이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별 수요 대비 사업수혜자의 비율은 이상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수혜자 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제 성별 수혜금액의 차이이다. 가장 단순한 지표는 성별 일인당 수혜금액의 차이이다. 실제 성별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지표이다. 다만 일인당 수혜금액의 차이는 사업의 실제 성별 수요의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만 의미가 있는 지표이다. 만약 사업의 성별 수요에 차이가 있다면 그 수요의 차이에 따라 일인당 수혜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일 것이다. 더구나 사업수혜의 귀착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며 일인당 수혜금액은 수혜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조금이 가장인 남자에게 지급되었을 경우, 보조금의 혜택은 직접 보조금을 받은 남자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접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의 성별을 파악하여 성별 일인당 수혜금액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실제적인 수혜의 성별 귀착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더욱 엄밀히 분석한다면 단순히 직접 전달되는 수혜금액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사업수혜자가 느끼는 수혜의 크기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수혜자의 수요 특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지원이라도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대상의 수요 추정이나 조건부 가치추정(contingent valuation)의 방식을 활용해서 사업 혜택의 귀착 정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적용이 실제 상황(특히 모니터링 수준의 성과관리 수준)에서는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출의 실제 금액이나 사업수혜 여부 정도의 단순한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⁴⁾. 그러므로 단순한 성별 일인당 수혜금액의 지표를 활용하더라도 지표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업의 상황별로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업의 수혜자나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에 바탕을 둔 지표와 더불어 사업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차이도 부가적인 지표로 의미가 있다. 다만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표본 추출과 결과 해석에 있어서의 적절한 기준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 특정 문제에 있어서 뚜렷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사업 계획이나 운영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지표, 즉 사업수혜자 수의 비율, 수혜금액, 수혜자의 만족도는 일차적으로 사업의 수혜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양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은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결과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성과지표가 요구된다. 물론 사업수혜의 귀착의 크기를 성별로 엄밀히 분리해 낼 수 있고 이 귀착의 크기가 사업의 결과와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된다면 사업결과의 양성평

4) 우리나라 성별영향평가의 심층평가의 경우도 대부분이 모니터링 수준의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심층평가가 목적이라면 보다 엄밀한 기준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수혜가 성별로 귀착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성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사업수혜의 귀착 정도를 엄밀히 분석하기 어렵다. 수혜 자체의 귀착이 바로 사업의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훈련 참여자 수의 성별 비율을 점검하고 성별로 교육·훈련 비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취업을 시키기 위해 교육·훈련 사업을 운영했다면 교육·훈련생 중 취업률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결과지표일 것이다. 이 때 취업률의 성별 차이 원인이 교육·훈련의 내용이나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 요인의 예로서는 노동시장에서 특정 성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과다 또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별이라는 관행의 존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부 요인을 감안하여 사업의 결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결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결과의 실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한 중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기간에 대한 명시적 고려를 하여 평가 주기를 결정하여야 의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대별된다. 사업의 직접적 수혜의 양성평등성과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이다. 직접적 수혜의 양성평등성은 수혜자 수와 수혜금액, 그리고 성별 만족도로 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결과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직접적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구성하는 지표 중 수혜자 수와 수혜금액의 경우, 지표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수혜자 수와 수혜금액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식의 평가는 지양

하여야 할 것이다. 성별 만족도 지표 역시 표본 추출과 결과 해석에 있어서 적절한 기준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의 경우도 외부 요인과 성과실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Ⅲ-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기준

성인지적 성과지표	세분화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설정	해석 시 주의사항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사업수혜자 비율의 양성평등성	$\frac{(\text{사업수혜자 성비})}{(\text{사업수혜 대상 모집단 성비})}$	베이스라인 목표치 = 1	사업수혜자 비율의 양성평등성에 차이가 있을 경우 ① 자연적인 수요의 차이인지 ② 사회화로 인한 수요의 차이인지 판단 필요
	사업수혜 금액의 양성평등성	성별 일인당 수혜금액 비율	베이스라인 목표치 = 1	성별 수혜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수혜금액 차이의 발생 원인 파악 필요 ① 수혜기준의 불평등 ② 사업 수요의 성별 차이인지 확인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사업수혜 결과의 양성평등성	사업의 성과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측정	베이스라인 목표치 = 1	사업결과의 성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 원인 파악 필요 사업방식이 특정 성에 유리한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 필요

또한 이상의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여정사업의 경우 기타 예산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점검 대상이므로 일차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결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작성된 여정사업의 성과지표들을 살펴볼 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혜와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양성평등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분석할 때, 일차적인 사업수혜자인 교육 대상자의 성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사업수혜자의 성비를 점검하지 않은 채 기관의 성과 자체만을 점검하는 것은 충

분한 성과 점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혜의 양성평등성과 결과의 양성평등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IV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1. 사업유형 분류	30
2.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32

본 절에서는 정부 예산사업을 사업수단을 바탕으로 유형화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지표 개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은 대부분 교육, 훈련, 일자리 제공, 복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유형⁵⁾을 망라하여 유형화하였다. 그 이유는 성인지예산서 도입 초기인 현재로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기 용이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모든 예산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을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는 사업유형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모든 사업유형을 망라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검토 내용은 추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일반 재정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2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기획재정부 외, 2012a). 물론 23개의 기준에 모든 재정사업이 포함될 수는 없지만 전체 일반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를 토대로 성과지표가 유형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묶어보면 <표 IV-1>과 같은 23개의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5) 본 절에서 사용하는 사업유형은 이전의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한 사업유형(여정사업과 성별영향분석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수단에 따라 구분한 사업유형(검사·인증·조사·연구, 교류·협력, 교육·훈련, 구매 사업, 구조개선, 기관운영 지원,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방지·예방·단속 사업, 보상금·보조금(인센티브 포함),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시설확충·개선, 신용·융자, 유통·마케팅, 인력양성·운영·활용, 자원유지보전, 정책 연구용역 및 연구사업, 종합 사업, 컨설팅 제공 및 지원,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행사, 행정집행, 홍보·방송, SOC 등 23개 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유형화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2012a)의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일반재정사업 성과지표 사례집 -』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1. 사업유형 분류

〈표 IV-1〉 사업유형별 23개 분류기준 및 개념

번호	사업유형	개념 및 사업예시
1	검사·인증·조사·연구	검사(심사), 인증, 평가, 조사, 연구 등 ▪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물 안전성 조사 ▪ 지식경제부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2	교류·협력	국제교류, 국내 및 국제 협력사업, 국제협약대응 및 이행사업 등 ▪ 환경부 : 국제환경협약대응 ▪ 법무부 : 국제형사협력
3	교육·훈련	각종 교육 및 훈련 활동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방송인터넷 강의 ▪ 고용노동부 : 고용촉진훈련
4	구매 사업	장비, 공구, 기구, 도서, 미술품 등 구입 ▪ 교육과학기술부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국방부 : 과학화훈련장비 확보
5	구조개선	기관 및 사업체의 통폐합 및 이전 ▪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규모화, 과수경쟁력제고 ▪ 국토해양부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6	기관운영 지원	경상경비 보조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기관운영 지원 ▪ 국세청 : 조세박물관 운영 ▪ 보건복지부 : 부랑인시설운영
7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 및 해당 서비스 제공비용 지원 ▪ 국가보훈처 : 보훈대상자 복지지원 ▪ 법무부 : 법률구조
8	방지·예방·단속사업	방지·예방·단속 관련 활동 ▪ 국토해양부 : 교통사고예방사업 ▪ 보건복지부 : 예방접종관리
9	보상금·보조금 (인센티브 포함)	보상금 및 인센티브 성격의 보조금 ▪ 고용노동부 : 고용유지지원금 ▪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0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상에 대한 급부 제공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법정보상 및 보조금과 구분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 고용노동부 : 산전 후 휴가급여
11	시설확충·개선	시설 및 건물, 건축물의 설비 확충(토지매입 포함)과 개선을 위한 사업 활동 ▪ 행정안전부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 환경부 : 하수처리장 설치

번호	사업유형	개념 및 사업예시
12	신용·융자	신용보증(대위변제), 이차보전, 투자·융자 등 ▪ 고용노동부 : 신용보증 대위변제
13	유통·마케팅	유통 및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 농림수산물부 : 농산물유통개선 ▪ 지식경제부 : 세계일류상품 마케팅 지원
14	인력양성·운영·활용	특정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및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자 인력활용 ▪ 외교통상부 : 한국전문가 육성
15	자원유지보전	국가기록물, 문화재, 산림자원, 생태계 등의 유지, 보수, 보전, 보존 활동 ▪ 문화재청 : 궁능원 보수정비 ▪ 산림청 : 산림자원보전관리
16	정책 연구용역 및 연구사업	연구개발 및 정책 연구 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용역비” 해당 사업 ▪ 국토해양부 :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 ▪ 문화재청 : 한민족생활문화 연구
17	종합 사업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 취업알선관리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판로지원
18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농촌진흥청 : 새기술보급사업 ▪ 산림청 : 임업기술지원
19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통계자료 조사 및 통계조사결과 제공 ▪ 통계청 :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 국토해양부 : 수산통계제공
20	행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 국내외 문화 및 예술 공연,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 ▪ 국가보훈처 : 호국보훈기념행사
21	행정집행	강제적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 ▪ 국세청 : 압류재산공매사업
22	홍보·방송	단순 정보전달 또는 의식, 행태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방송 관련 활동 ▪ 국세청 : 납세안내 및 세정홍보사업 ▪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방송 지원
23	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토목 공사 ▪ 국토해양부 : 고속도로건설 ▪ 국토해양부 : 광양항 개발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2012a)

2.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사업유형별로 성인지적 성과지표 개발 시 주의점과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 담당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을 사업수단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본 지침을 참고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지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본 절의 목적이다. 다만 본 지침은 예시적인 것으로 실제 성과지표의 개발은 개별 사업의 범위와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과지표 중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점검은 기본적으로 각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결과지표를 성별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유형사업의 결과지표는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일반재정사업 성과지표 사례집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2012a)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표 IV-2〉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분류	사업유형	성과지표안	
1	검사·조사· 인증·연구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지표인 사업의 정확성 및 적시성은 비교적 성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음.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검사·조사·인증에의 성별 참여 비율을 파악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음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필요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인당 동일한 기준으로 수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혜금액은 중요한 요소가 아닐 가능성 큼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의 활용도와 활용을 통한 결과의 성별 차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기계류 품질 인증 사업인 경우 인증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성별 차이와 인증결과를 활용하여 수출 또는 사업화하는 실적의 성별 차이
2	교류·협력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자의 성비 모니터링 필요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분류	사업유형	성과지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사업의 수혜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점검 불필요 ▪ 수혜자 성별 만족도 -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성격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는 별도의 결과지표 설정 불필요. 사업의 성격이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 결과지표를 개발하고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 점검 필요
3	교육·훈련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성비 - 모니터링 필요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 교육 및 훈련 비용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 모니터링 필요 ▪ 수혜자 성별 만족도 -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훈련 사업 참여 결과의 양성평등성 - 예: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훈련 참여 후 취업률의 성별 차이
4	구매 사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사업은 대인 사업이 아니므로 수혜자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다만 구매 물품의 공급자의 성별이나 구매 물품에 대한 성별 선호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모니터링이 필요함 ▪ 수혜자 성비 - 구매물품 공급자의 성비나 구매물품으로부터 혜택 받는 수혜자의 성비를 의미함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 모니터링 필요 ▪ 수혜자 성별 만족도 -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 구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하며 구매 사업의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가능하다면 점검 필요
5	구조개선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선 사업은 기관이 사업대상이긴 하지만 구조개선을 통해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 차이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 ▪ 수혜자 성비 - 구조개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원의 성별 차이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 구조개선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적(소득) 변화의 성별 차이

분류	사업유형	성과지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선 사업 참여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협동조합 합병사업의 경우 합병으로 인해 증가된 생산성 및 수익률이 결과지표임. 이러한 생산성 및 수익률 증가로 인한 혜택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6	기관운영 지원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운영 지원 사업은 기관 자체가 사업임. 따라서 기관에 속한 수혜자의 성별 차이를 모니터링할 수는 있음. 그러나 기관 선정의 다른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경우,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기 어려움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는 기관에 속한 인원의 성비(잠재적 지원대상 기관대비)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단위로 금액이 지원되므로 수혜자 수 성비 파악만으로 충분함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만족도를 비교할 수는 있으나 기관이 지원단위이므로 의미 미약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으로 인한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이 지원단위이므로 성별 차이를 보는 것은 의미 미약 - 궁극적으로는 지원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을 볼 수는 있으나 해당지표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
7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필요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 서비스 제공 비용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 모니터링 필요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 서비스 사업 참여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성매매피해자 상담과 같이 특정 성이 서비스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할 경우, 결과의 양성평등성은 별로 의미가 없음
8	방지·예방·단속 사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자의 양성평등성 점검 필요

분류	사업유형	성과지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은 동 유형의 사업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음. 다만 사업대상의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성 고려 필요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특성상 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선결조건임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사업에 따라서는 곤란한 경우 발생(환경오염 예방사업 등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이 어려운 경우)
9	보상금·보조금 (인센티브 포함)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필요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보조금 비용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 모니터링 필요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보조금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보조금 지급의 결과에 대한 양성평등성 점검
10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수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 자격 대상의 성비 대비 실제 수급자의 성비 - 개인이 지급단위가 아니고 가구가 지급단위인 경우,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파악 곤란 ▪ 수급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기준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설정되고 집행되는 지에 대한 점검 필요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만족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부의 지급으로 인한 결과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장애아 교육지원사업인 경우 장애아의 초·중등 교육 진학율의 성별 차이
11	시설확충·개선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확충·개선의 성과지표는 공정율 또는 확충 및 개선으로 나타나는 효과임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확충·개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원의 성별 차이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단위로 지원될 경우 예산의 성별 차이는 의미가 미약함

분류	사업유형	성과지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확충·개선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확충·개선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평가에서는 지표 개발 곤란
12	신용·융자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융자 수혜자의 성비(잠재적 수혜자의 성비 파악이 관건)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융자 수혜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점검 불필요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신용·융자사업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선결조건임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융자 사업 참여 결과의 양성평등성
13	유통·마케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혜자 성비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단위로 지원될 경우 예산의 성별 차이는 의미가 미약함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또는 수익률 증가의 성별 혜택
14	인력양성·운영·활용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 필요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운영 비용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 모니터링 필요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운영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양성사업으로 배출된 자격을 갖춘 인력의 수, 혹은 양성된 인력이 관련분야 발전에 기여한 실적 등의 양성평등성을 지표로 활용 가능

분류	사업유형	성과지표안	
15	자원유지보전 (문화재 포함)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특성상 성별 수요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유지보전대상 자원 선정시 성별 선호의 차이 고려 필요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전 대상 자원에 대한 성별 선호 차이 점검 필요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금액의 점검이 어려움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사후 만족도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유지 보전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이외의 별도 지표 설정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전문가 평가를 활용할 수는 있음
16	정책 연구용역· 연구사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연구용역·연구사업의 경우는 사업 수행자의 양성평등성이나 연구주제의 성별 선호도 반영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자의 성비나 연구주제의 성별 선호도 차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수행자나 주제 선정의 객관적 기준에 대한 점검이 병행되어야 함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수행자의 수혜금액은 모니터링이 가능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연구 주제나 결과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의미함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연구용역·연구사업의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하며 사업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가능하다면 점검 필요
17	종합 사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단위 지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성별 통계의 가용 확보 곤란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관 구성원의 성비를 모니터링 할 수는 있으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기관 선정의 객관성 점검이 병행되어야 함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지급단위가 아니고 기관이 지급단위인 경우, 수혜금액의 양성평등성 파악 곤란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사업이므로 수혜자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사업의 결과지표는 다양할 수 있으며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 파악이 가능한지 점검 필요

분류	사업유형	성과지표안	
18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필요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경영 컨설팅 비용이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 모니터링 필요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농가경영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후 농가 소득 증가의 양성평등성을 지표로 활용가능. 그러나 농가의 성별 소득에 관한 데이터의 존재 여부 파악 필요
19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정보 제공 사업은 비교적 양성 중립적인 사업이지만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는 점검 필요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정보 활용자의 성별 차이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금액은 중요한 요소가 아님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된 통계정보 사용자의 성별 만족도 차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정보 제공 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정보의 결과지표는 통계정보의 활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하는 지표임. 이러한 목표는 다양하며 이러한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가능하다면 활용 가능
20	행사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자의 성비 모니터링 필요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참여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점검 불필요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성격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는 별도의 결과지표 설정 불필요. 사업의 성격이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 경우 결과지표를 개발하고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 점검 필요
21	행정집행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집행의 경우, 행정 절차의 신속성, 공정성, 효율성이 주된 성과지표이므로 수혜자의 성비나 지원 금액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수혜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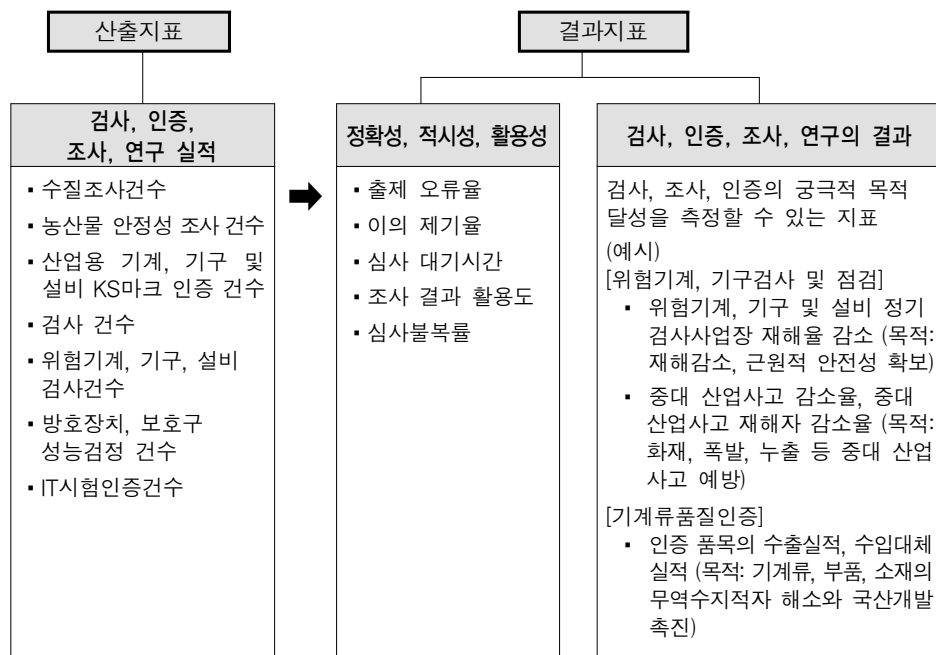
분류	사업유형	성과지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집행 대상자의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점검 필요 - 다만 사업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관건임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집행 결과의 양성평등성 - 행정집행 사업의 절차 관리적 지표(공정성, 신속성, 효율성) 외의 결과지표 도출은 용이하지 않음
22	홍보·방송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방송의 경우는 홍보나 방송 주제의 성별 수요가 주된 관리 대상임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나 방송의 구체적 대상이 있는 경우는 성비 파악이 가능하지만 불특정 대상이 사업대상인 경우는 홍보나 방송 주제의 성별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금액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음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방송 결과의 양성평등성 - 홍보나 방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사업에 따라 다양하며 해당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 파악이 가능하다면 활용 가능
23	SOC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사업은 대인 사업이 아니므로 성인지적 성과관리가 곤란함. 다만 사업자나 SOC 사업 수요의 양성평등성은 점검 가능 ▪ 수혜자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성비나 사업으로부터 혜택 받는 수혜자(예: SOC 시설 이용자)의 성비를 의미함 - 다만 사업자나 사업 선정의 객관적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수혜금액은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SOC 수혜자의 수혜금액 도출은 용이하지 않음 ▪ 수혜자 성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로 수혜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 SOC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다양하며 사업결과 지표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가능하다면 점검 필요

주: 일부 사업유형의 경우 박노옥·나원영(2008)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발취하여 재구성함.

가. 검사·인증·조사·연구 사업

검사(심사), 인증, 평가, 조사, 연구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사업유형이다. 동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은 검사, 안전성 조사, 품질 인증, 실태 조사, 조사 및 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부처별 사업 예시로는 농산물 안정성 조사, 수질 조사 및 연구, 기계류 품질 인증,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 탐사, 국가시험운영, 그리고 국가산림자원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검사 및 인증사업의 성과지표는 (1)정확성과 (2)적시성 그리고 (3)검사 및 인증 결과의 활용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사, 인증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및 연구 사업은 조사 연구물의 활용도 및 전문가 만족도 등 조사 연구물의 질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IV-1] 검사·인증·조사·연구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⁶⁾

6) 본 절에서 삽입된 23개 사업유형별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2012a)에서 발취한 것임.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해당 사업의 주된 성과지표인 사업의 정확성 및 적시성은 비교적 성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검사(심사), 인증, 조사 및 연구에의 성별 참여 비율을 파악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증사업을 하는 이유가 특정 제품에 대해 공신력을 부여하여 매출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증 신청 사업자들의 성비를 파악하여 대상자 중에서 사업 참여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이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업 참여자나 수혜자들의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 현재 성인 지예산서에서는 만족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면 간단히 성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측정을 위해서는 사업결과의 활용도와 활용을 통한 결과의 성별 차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통해 사업화 또는 수출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의 경우, 인증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성별 차이와 인증결과를 활용하여 수출 또는 사업화하는 실적의 성별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업화 또는 수출 실적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이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3) 사례: 현행 성인지예산서에는 해당 사업유형을 찾아보기 어려움

현재의 성인지예산서에서는 동 사업유형은 찾을 수 없었다. 동 사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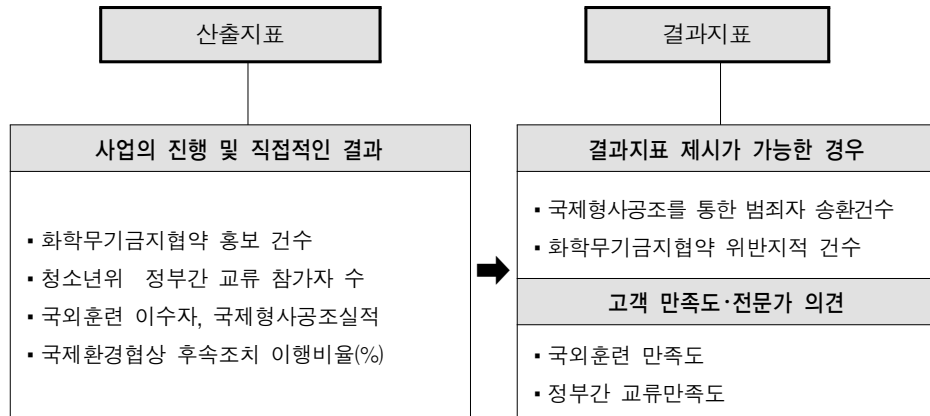
이 비교적 성에 대해 중립적이므로 특정 사업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성인지예산서 포함 사업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교류·협력 사업

교류·협력 사업유형은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기술 및 업무 협력, 조약 체결, 협약 대응 및 이행, 우호 증진 등이 주요 활동인 유형이다. 동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은 국제협력 및 국제협약 체결, 국제협력 및 국제협약 대응 및 이행 사업, 국제교류를 위한 초청사업, 민간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적인 사업으로는 화학무기금지협약 운영, 국제형사 협력, 국제환경협약 대응,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 등이 있다.

교류·협력 사업의 통상적인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교류·협력 사업 중 사업의 성격 및 추진 단계에 비추어 결과지표 제시가 가능한 경우, 사업의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결과가 장기에 나타나며 결과의 측정이 어려운 일부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경우,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성과지표 개발이 가능하다.

수혜자가 비교적 뚜렷한 경우는 수혜자 중심의 지표를 사용하고 사업의 질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의 수집이 어렵다면 전문가 패널 등 정성적 자료를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국제협약의 이행이나 대응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협약의 이행 정도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IV-2] 교류·협력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참여자의 성비를 일차적인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의 수혜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수혜금액의 양성평등성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는 없다.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고위급의 외교관련 회의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측정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의 성격이 일회성 이벤트일 경우 별도의 결과지표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반복적인 성격의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결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과지표가 성별 차이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면 성별

차이의 존재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사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

본 사업의 목적은 미래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활용 및 국내 신진 우수연구자의 해외 파견을 통한 출연(연) 및 대학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정책대상은 국내외 소재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소속된 우수 연구자이다.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의하면 교육통계에 파악된 정책 대상자는 여성 연구자가 58,772명으로서 전체 연구자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연구자는 297,424명으로 83.5%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연구자 중 여성이 18.5%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 수혜금액 기준으로는 여성이 19%의 수혜를 받았다.

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는 여성 수혜비율로서 2012년 목표치가 19%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목표치의 적정성이 문제가 된다. 수혜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은 16.5%이지만 2%를 초과한 여성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수혜율을 0.5% 상승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신진 우수 연구자들이 수혜 대상이므로 성비 외에 연구자 개인의 역량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의 성비 기준은 최소 기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연구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최소한 성비를 특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소 기준으로서의 성비를 19%로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사업의 경우 국내 연구 인력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일차적인 지표는 사업의 수혜자 성비와 수혜금액의 성비이다.

동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는 사업 참여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향상과 연구 결과물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동 사업 참여자들의 연구 성과를 추적해서 사업 참여 전후 연구 결과물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즉 동 사업의 결과에 대한 양성평등성 지표는 연구 결과물의 향상 정도의 성별 차이일 것이다. 만약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지원방식이 특정 성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육아나 보육의 부담이 있는 여성 연구자의 경우, 해외 파견 생활 시 남성과 다른 조건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교육·훈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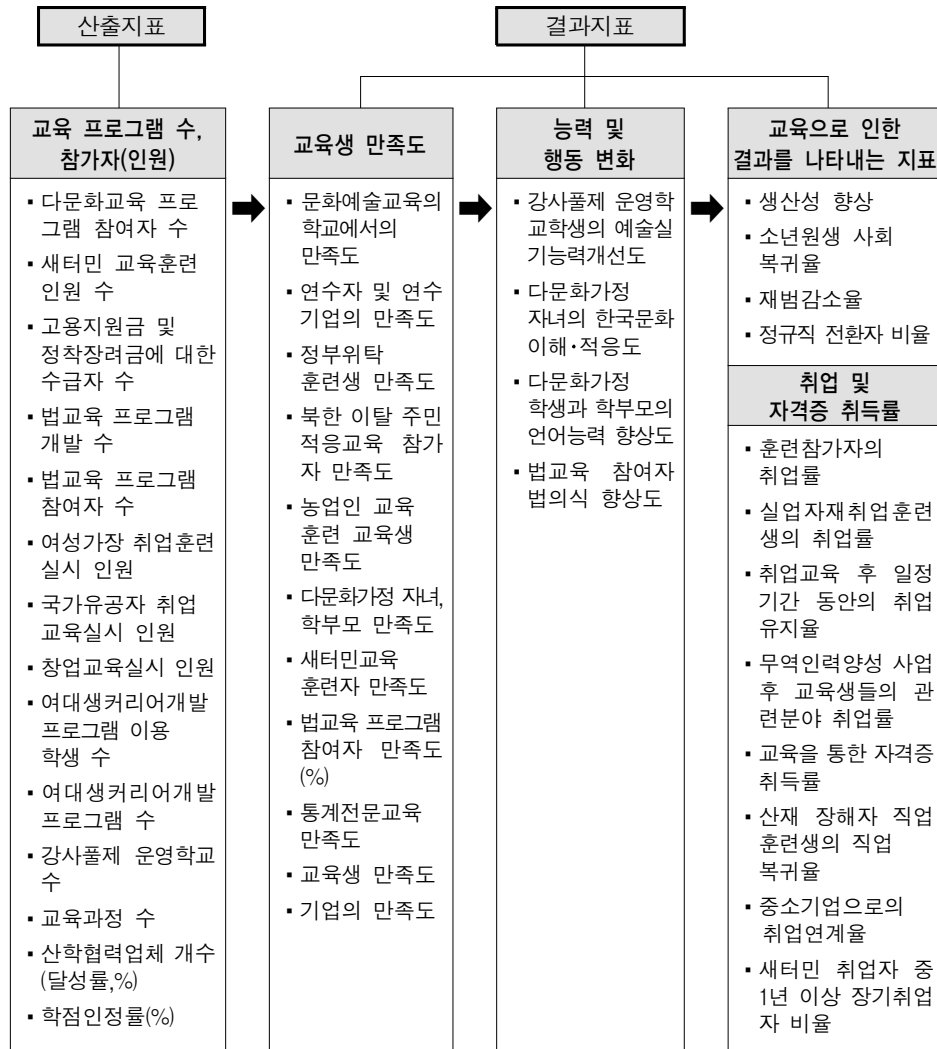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 중 교육·훈련 관련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대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에 적극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훈련 사업유형은 학업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의식함양, 취업 관련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육 및 훈련 과정 개설 및 운영,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통신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적인 사업으로는 농업인 교육훈련, 국민정보화 교육사업,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교육방송 인터넷 강의, 교정교화, 북한 이탈주민 교육 훈련,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재취업 훈련 등이 있다.

교육·훈련 사업의 통상적인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교육 사업의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과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당초 교육을 통해 기대했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참가자들의 지식, 기술,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교육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나타나므로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지식과 태도의 변화는 교육기간 동안 발생하므로 교육 후 교육만족도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경우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된 정보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병행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완료 직후의 초기적인 성과 외에 교육 및 훈련 사업 참가자들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인 취업, 창업, 사업화 성공, 경제적 자립 등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IV-3] 교육·훈련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참여자의 성비를 일차적인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사업의 수혜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수혜금액의 양성평등성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는 없다. 또한 교육·훈련 사업의 경우 대부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교육·훈련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비교적 명확하다. 교육·훈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가져오고자 하는 변화의 정도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한 훈련 사업이면 유사한 조건의 참여자들의 취업 성과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은 가족 상황, 학력, 경력, 나이, 건강 상태 등이므로 이러한 여건이 유사할 경우 취업 성과가 성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단순히 성별 차이 비교만을 시도할 경우, 사업 성과의 차이가 성비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차이를 그 원인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3) 사례: 법무부 『교정교화』

본 사업의 목적은 시설 수용자들의 인성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며 정책 대상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인원이다.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의하면 2011년 현재 법무부 자체 통계에 파악된 정책 대상자는 여성 수용자가 1,500명으로서 전체 수용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수용자는 30,500명으로 95.3%를 차지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교정시설 수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사업수혜자 수나 수혜금액의 양성평등성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된

다. 이는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 내용이 특정 성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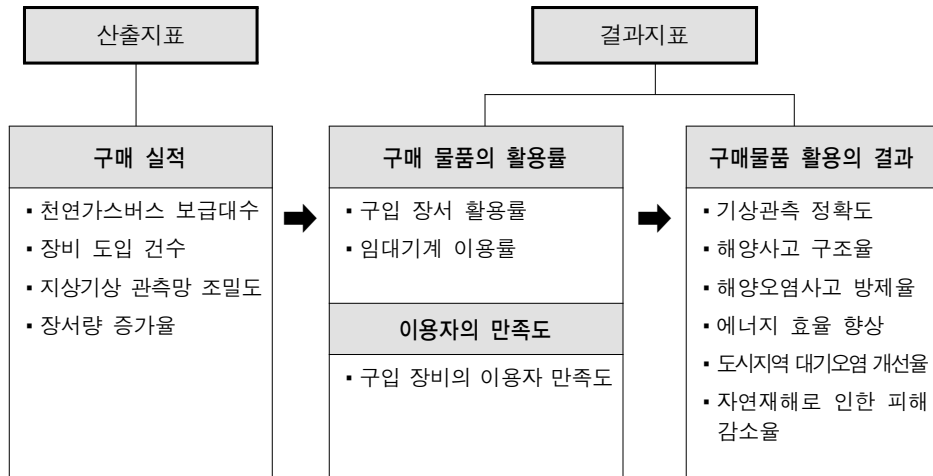
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는 여성 수형자 사회적 처우 수혜비율로서 기본적으로 전체 수형자 대비 여성 수형자 비율이다. 이 비율은 사업 부처나 담당자가 별도의 노력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바람직한 성과지표는 일차적으로는 교정교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동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에 대한 초기 결과로서는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고 궁극적인 결과로서는 재범률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라. 구매 사업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 중 구매 사업은 찾기 어렵다. 구매 사업은 대인 서비스 제공 사업이 아니므로 양성평등성 쟁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구매 사업은 장비, 공구, 기구, 도서, 미술품 등의 구매 관련 활동이 핵심이 되는 사업유형이다. 예시적인 사업으로서는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과학화 훈련장비 확보, 어업지도선 건조 및 운영, 과학적 수사 활동 지원 및 감정장비 현대화 등이 있다.

구매 사업의 통상적인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구매 활동의 경우, 구매 과정이 비교적 단기로서 사업수행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확충·개선 또는 SOC 사업보다 결과지표 활용이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단순 투입 및 투입을 통한 산출지표를 지양하고 산출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는 결과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Ⅳ-4] 구매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구매 활동의 경우 수혜자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곤란하다. 특정 장비를 구매했을 경우 특정 성이 혜택을 더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장비 구매는 특정 성을 수혜자로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지 않는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기능을 갖춘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매 활동의 경우 누구에게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여성 공급자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공공 구매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구매 활동인 경우는 공급자의 성비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급자의 성비를 사업수혜 지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구매 사업의 경우 초기 결과지표로는 구매 물품이나 장비의 사용자 만족도 또는 활용률을 이용할 수 있고 궁극적인 결과지표로서는 구매 물품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개선 정도일 수 있다.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초기 결과지표인 만족도나 활용률에 대한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활용률의 경우는 사용자의 성별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업에 있어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매 물품이나 장비가 양성평등과 연계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성 중립적인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사례: 국토해양부 『저상버스도입보조』

사업목적은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어 휠체어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책대상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이다.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정책 대상자로서 인구 전체 여성과 남성을 기술하고 있다. 사업수혜자와 수혜금액은 성별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다. 저상버스 도입이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도입 지역의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와 임산부(파악이 곤란하다면 추정치로서 가임기 결혼 여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면 사업수혜자의 성비를 파악할 수 있을 여지는 있다. 다만 이러한 지표를 도출하면 어떻게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저상버스가 재원의 제약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서만 순차적으로 도입된다면 교통 약자 활용도가 높은 지역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도입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교통 약

자나 성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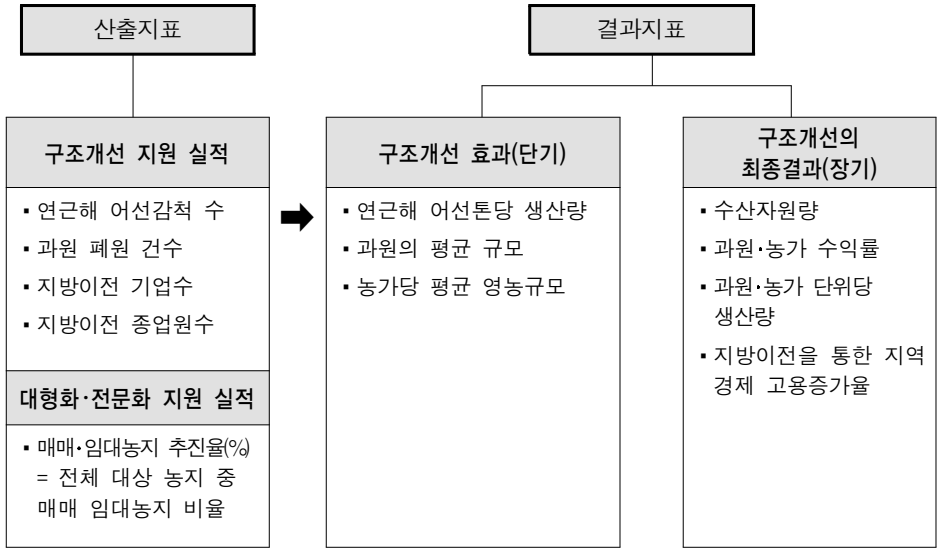
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는 저상버스 도입비율로서 2012년에는 전국 시내 버스의 20%를 도입한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투입 예산에 비례하는 성격이 강한 지표로서, 사업 자체의 노력이나 효과성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도입 지역의 수혜자인 교통 약자 수나 교통 약자의 저상버스 활용도, 또는 사용자 만족도 등을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입 지역의 교통 약자 수는 사업의 수혜 범위를 파악하는 의미가 있고 활용도나 만족도는 저상버스 자체가 실제 교통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동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수혜를 받는 교통약자 중 성비, 활용도나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마. 구조개선 사업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 중 구조개선 사업은 찾기 어렵다. 구조개선 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대상이라기보다는 조직이나 산업분야가 대상이므로 성별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개선 사업은 특정 산업 분야나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특정 부문이나 요소에 대한 통폐합 및 지원 등을 통해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 활동은 규모 감축, 구조조정, 매매, 임대차, 교환 및 분할, 정비 지원, 시설 이전 등이다. 예시적인 사업으로서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과수원 경쟁력 제고,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지원, 기업지방이전 등이 있다.

구조개선 사업의 통상적인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이상적인 결과지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효율성 향상(단위당 생산량 또는 매출액 증가)이나 수익성 증대 등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구조개선 실적에 그치는 지표가 아니라 구조개선을 통한 변화/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IV-5] 구조개선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의 수혜자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시 말해 구조개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경우, 사업수혜자가 특정 성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수혜 단위는 주로 특정 분야나 조직의 종사자일 것이다. 다만 구조개선 작업 중에 발생하는 인력 감축 과정의 피해자 발생 여부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구조개선 사업 중 인력 감축이나 조정 계획이 포함된 경우는 인력 감축 대상의 성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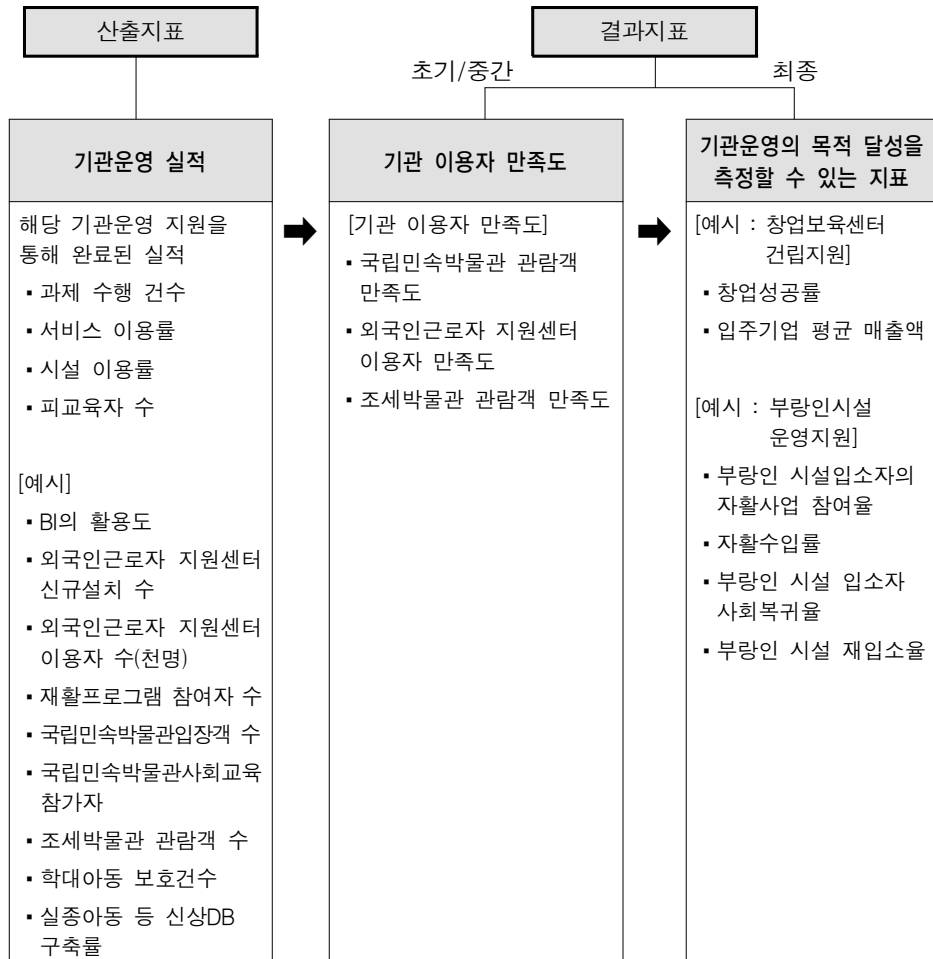
구조개선 사업의 결과는 조직이나 특정 분야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이다. 사업의 단위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나 분야이므로 사업결과를 성별로 분리하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3) 사례: 현행 성인지예산서에는 해당 사업유형을 찾아보기 어려움

바. 기관운영 지원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기관운영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여정사업들이다. 대체로 기관의 특성이 여성관련 정책, 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다. 물론 여성관련 정책 기관이 아니더라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할 여지가 있는 기관운영 지원 사업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운영 지원 사업은 주로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보조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요 사업 활동은 기관 운영비 지원, 기관 인건비 지원 등이다. 예시적인 사업으로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지원, 조세박물관 운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등이 있다.

기관운영 지원에 속하는 사업의 통상적인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경상적 경비 보조인 경우 기관운영 실적 및 기관 이용자 만족도, 기관운영을 통한 최종 목적 달성 여부를 입증할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경영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림 IV-6] 기관운영 지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기관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수혜자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곤란하다. 기관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관의 성격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관련

정책 기관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를 점검할 수는 있으나 개별 수혜자 관점에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의미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사업 수혜 금액의 성별 차이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점검하는 의미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양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에 지원되는 전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 특정 서비스의 제공이 특정 성에 편향되지 않는지를 점검할 여지는 있다. 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성별 차이나 만족도 차이를 점검할 수 있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기관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일차적인 결과지표는 기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로 볼 수 있고, 보다 궁극적인 지표는 기관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기관 이용자의 만족도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 성에 편향된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인 경우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성비와 이용자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내용이 적정한지를 점검할 수 있다. 보다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점검으로서는 기관 서비스 이용자 중 창업에 성공한 비율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도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창업에 영향을 주는 개인별 특성을 적절히 통제하여 성별 차이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사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의 목적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여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책대상은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군인, 경찰, 국회의원 및 보좌관, 광역·기초의회 의원, 공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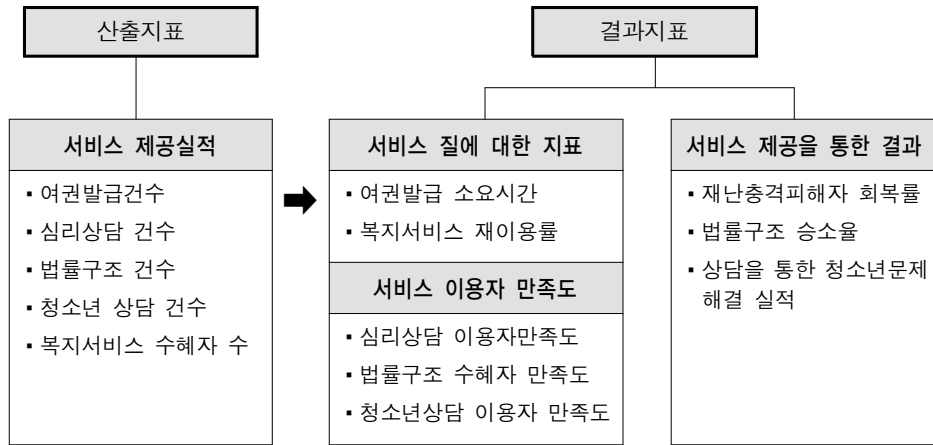
유관단체 직원 및 일반인이며, 성과지표로는 교육인원 수와 교육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다.

동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수혜의 성별 비율을 점검할 필요도 있고 교육 만족도의 성별 차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수혜자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성별 구분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성인지적 분석을 위해서는 성별 구분된 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

사.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은 법률 서비스, 변리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등 각종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시적인 사업으로는 여권 발급, 재난 피해자 심리상담, 민·형사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지식재산권 분쟁관련 소송비용 지원 및 무료 변리상담 서비스 제공, 보훈 도우미, 청소년 상담 등을 들 수 있다.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속하는 사업의 통상적인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심리상담, 법률 서비스 등은 상담을 통한 회복 정도, 승소율과 같은 결과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명서 발급 업무 등 단순 행정서비스 제공의 경우는 발급 시간의 단축, 민원 불편사항 감소 등의 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도우미를 통한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더불어 전체 서비스 수혜 대상 중 실제 수혜자 수 등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파악하는 지표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림 Ⅳ-7]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의 경우 수혜자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구체적인 개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수혜자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성비와 비교하여 수혜자의 성비를 점검함으로써 일차적인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다.

사업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도 비교적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다. 만약 서비스 제공이나 지원이 비교적 동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수혜 건수를 수혜금액으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의 일차적인 결과지표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받은 수혜자가 느끼는 만족도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수혜자의 만

속도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서비스가 특정 성에 편향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다.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의 궁극적 결과지표는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궁극적 결과 달성에 있어서 성별 편차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법률구조 서비스의 결과 승소율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승소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사건의 특이사항을 고려한 이후에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서비스의 내용이 성별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례: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목적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필요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대상은 요보호 독거노인 211,000명,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 노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성평등 목표는 여성인력 활용 및 여성 일자리 확대이다.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담긴 사업대상자는 2011년의 경우에 여성 66%, 남성 34%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수혜자는 여성 98.6%, 남성 1.4%를 제시하고 있다. 예산 현황은 사업수혜자의 성비와 동일한 비율이 제시되고 있다. 성과지표로서는 여성수혜자 비율을 제시하고 현행 수준인 98%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업수혜자가 사업의 수혜를 받는 노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업에 참여하는 도우미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그 비율이 98%인 것으로 볼 때 도우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업수혜 대상은 노인층으로 설정하고 실제 수혜자 비율은 도우미를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동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자체로서 보면 도움을 받은 노인의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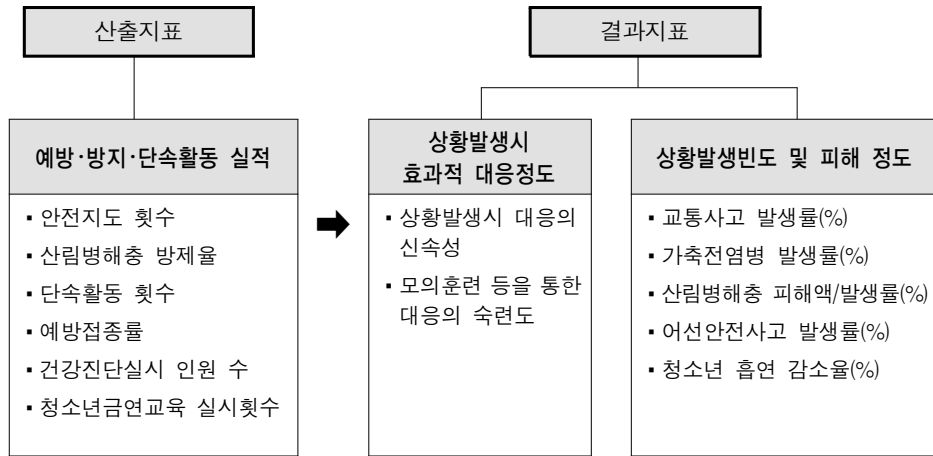
도와 생활편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수행자인 도우미들이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일자리 측면에서는 도우미들을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수혜자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의 목적을 설정하고 양성평등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사업수혜 대상자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인계층과 도우미로 취업하고자 하는 계층으로 나누어서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과 사업수혜 결과의 양성평등성도 별도로 분리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 방지·예방·단속 사업

방지·예방·단속 사업은 특정 사건, 상황 또는 현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미리 대처하거나 억제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때로는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단속활동이 수반되기도 한다. 사업의 주요 활동은 안전 지도 및 안전심사, 예방접종 시행, 농작물 재해예방 관리, 산림병해충방제, 해양오염방지 활동, 안전조업지도, 유해 불량제품 합동 단속 등이다. 예시적인 사업은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 예방활동,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감시 및 사후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방지·예방·단속 사업의 통상적인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범죄 등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의 경우는 발생건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발생빈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특정상황 발생 방지 및 유사시 효과적 대응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성과지표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방 및 단속 사업의 경우 산출물이 결과와 직결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런 경우 산출지표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예방접종율이 의미있는 산출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V-8] 방지·예방·단속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방지·예방·단속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혜자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용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구체적인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지·예방·단속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수혜자의 양성평등성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현상이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병해충 등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면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방지·예방·단속의 효과가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착되는 것인지, 특정 지역이나 집단 또는 국민 전체에게 무차별적으로 귀착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방지·예방·단속 사업의 결과지표는 방지·예방·단속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가축 방역 사업의 경우 가축 방역으로 인해 가축전염병 발생이 감소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결과지표이다. 가축전염병 발병률의 경우 그 자체가 특정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축산 농가 세대주의 성별로 그 효과를 구분해서 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세대주인 축산 농가인 경우 가축전염병 발병률이 남성 세대주 축산농가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가축 방역 사업이 여성 세대주 축산 농가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세대주의 성별로 가축전염병 발병률을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성별 분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별히 세대주의 성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이유가 없다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점검의 의미가 미약할 수도 있다.

3) 사례: 법무부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사업의 목적은 성폭력 사범 단속 강화로 민생치안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책대상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켜 여성이 사회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정책대상과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정책대상은 단속 대상으로 본다면 성범죄자이고 수혜 대상으로 본다면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 성평등 목표는 여성 권익 보호,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라고 기술되어 있다.

성별 수혜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업대상자는 성별 구분 없이 2011년에는 24,286명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사업대상자를 성범죄 관련 범죄자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수혜자도 동일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예산 현황은 사업비 자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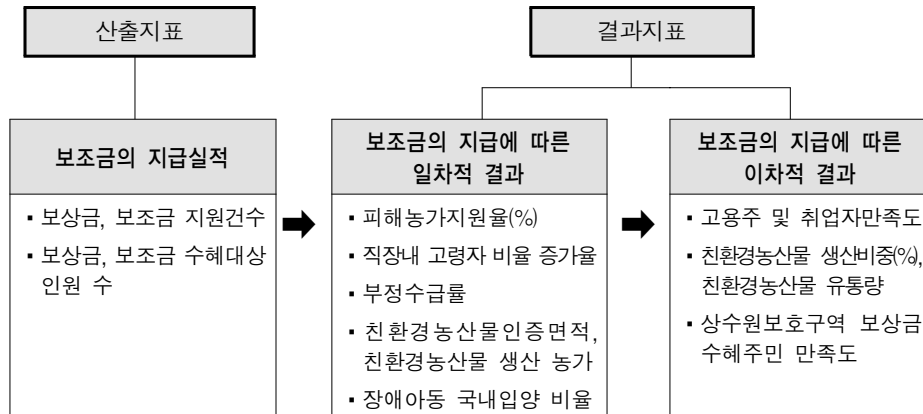
성과지표를 성폭력 사범 단속 강화로 설정하고 목표치를 전년대비 3% 실적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문제는 단순히 전

년 대비 성범죄 및 폭력 사범 단속 수효를 증대시키겠다는 산출지표적 성격에 있다. 다시 말해 성범죄나 성폭력 발생율을 감소시키겠다는 결과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속 범죄인 수효를 증가시키겠다는 산출목표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하는 의미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특정 성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특별히 성인지예산서에 포함해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자. 보상금·보조금 사업

보상금·보조금 사업은 보상금 지급 또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보조금 지급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사업의 주요 활동으로는 소득 보전 및 폐업지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포함한다. 사업 예시로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FTA 피해 농가 경영안정, 환경부의 4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보상금·보조금 사업의 통상적인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보상금·보조금 수혜자의 수와 같은 산출지표는 사업물량의 규모에 따라 자동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업추진을 통한 궁극적 혜택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지표와 더불어 사업 수행 과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적정 대상자에게의 지급 여부와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지표가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은 보상금 및 보조금 지급의 적시성, 지급 서비스의 접근성, 서비스의 정확성 등을 의미한다.



[그림 Ⅳ-9] 보상금·보조금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보상금·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상금·보조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특정 조건 자체가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는지를 점검하지 않고서 단순 성비를 기준으로 양성평등성을 분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수혜 대상자를 파악할 때 사업수혜 조건에 부합하는 모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업 수혜금액도 사전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 금액의 결정 조건에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보상금·보조금 사업의 경우 결과지표는 보상금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 정도를 측정하고 동시에 지급 서비스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판단은 문제 해결의 정도가 성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금의 경우는 보상금 수혜자의 만족도도 일차적인 결과지표로 활용되므로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례: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 중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상금·보조금 사업을 찾기는 어려웠고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동 사업을 사례로 선정할 수 있다. 사업의 목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통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정책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다. 성평등 목표 분야는 여성 권익 보호, 대상별 여성 복지 욕구 충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으로 기술되어 있다.

성별 수혜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업대상자는 2011년 현재 79명으로 기술되어 있고 실제 사업수혜자도 79명이다. 그러므로 사업수혜에 있어서 양성평등성을 논할 필요는 없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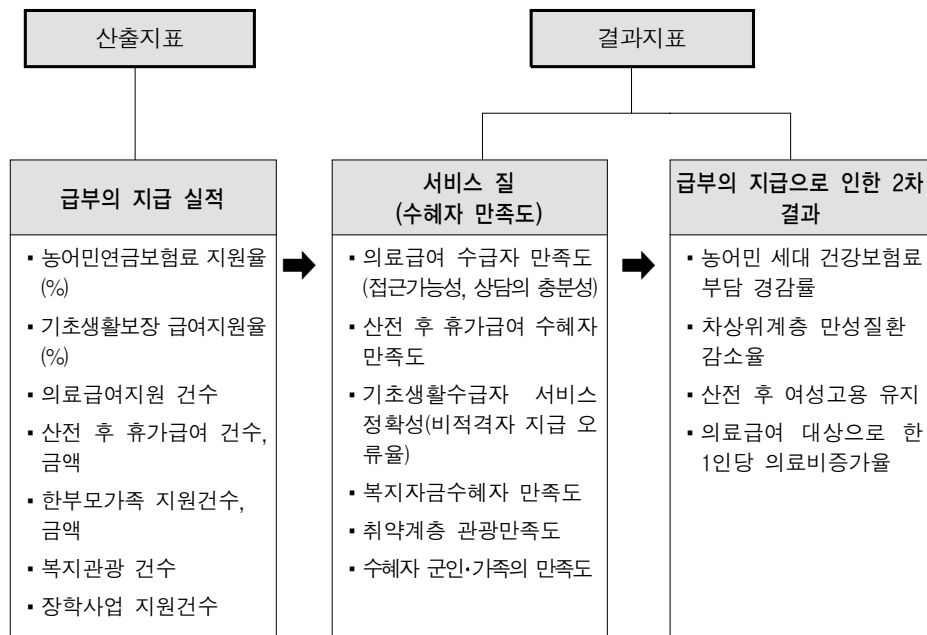
성과지표로서는 위안부 피해자의 만족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목표치는 64점이다. 보상금이나 보조금 성격의 사업에서 만족도는 일차적인 결과지표로서의 의미는 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차.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은 상기의 보상금·보조금 사업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보상금·보조금 사업이 인센티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특정 수혜 대상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급부 제공활동의 성격이 강하다. 사업 활동은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의 의료 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호국장학금 지급 등이 있다.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의 통상적인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단순한 지급 실적과 같은 산출지표보다는 급부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혜자의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사회보장 서비스의 정확성, 적시성, 접근성과 편리성 등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Ⅳ-10]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해석은 보상금·보조금 사업과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특정 조건 자체가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포함하는지를 점검하지 않고서 단순 성비를 기준으로 양성평등성을 분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수혜 대상자를 파악할 때 사업수혜 조건에 부합하는 모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업 수혜금액도 사전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급 금액의 결정 조건에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의 경우 결과지표는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 정도를 측정하고 동시에 지급 서비스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판단은 문제 해결의 정도가 성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사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지급』

사업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성평등 목표 분야는 여성 권익 보호, 대상별 여성복지 욕구 충족 그리고 여성노인 지원이다.

성별 수혜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업대상자는 2011년 현재 3,870,000 명으로 여성 비율이 58.9%이고 남성 비율이 41.1%이다. 사업대상자 추정

근거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이다. 이때 노인 인구의 70% 기준은 고령인구의 성별 소득 수준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0%를 적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실제 사업수혜자는 여성이 64.9%이고 남성이 35.1%이다. 그리고 사업 수혜금액은 여성이 65%이고 남성이 35%이다. 사업수혜 비율이나 금액은 사업대상 집단의 성비와 비교해 보면 여성수혜율이 높다. 그러나 사업대상자에 대한 추정에 있어서 고령인구의 남녀 소득 수준 격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여성수혜율이 높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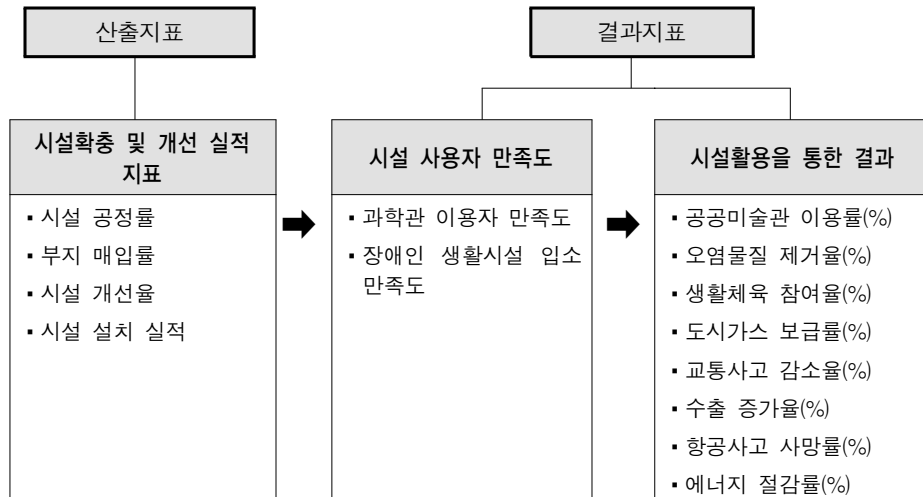
성과지표로서는 여성노인 수혜자 비율을 제시하고 목표치는 과거 2개년도 실적치의 평균치인 65%로 설정하고 있다. 동 사업은 일정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보장보조금 사업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성인지예산서 정보만으로는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성인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노령연금이 고령인구의 성별 경제수준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노령연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에 미약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성별 소득 격차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카. 시설확충·개선 사업

시설확충·개선 사업은 시설 및 건물, 건축물의 설비 확충 및 개선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 주요 활동으로서는 사무용, 주거용, 후생·관리 시설 등의 신축, 증개축 및 개선을 포함한다. 사업의 예시로서는 국토해양부의 국도시설개량, 국방부의 독신숙소 확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리시설개보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을 들 수 있다.

시설확충·개선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정률 지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반영하는 결과지표의 사용을 목표로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과정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일부 완료된 시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과지표를 과정지표와 함께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림 IV-11] 시설확충·개선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시설확충·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설의 활용도나 시설 사용의 편의성 또는 시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등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점검이 가능하다. 시설의 활용도를 사업수혜로 본다면 시설 활용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점검은 가능하다. 그리고 시설 사용에 대한 만족도의 성별 차이도 점검이 가능하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시설확충·개선 사업의 경우 초기 결과지표는 시설의 활용도 또는 만족도라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인 결과지표는 시설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라면 과학관의 방문자 또는 사용자 수로 측정되는 활용도와 과학관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결과지표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율이 결과지표라고 볼 수 있다.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용도와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면 교통사고 감소율과 같은 궁극적인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막연한 근거만을 바탕으로 사업의 궁극적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은 실익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시설 설계와 기획 자체가 특정 성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시설물을 활용한 결과의 양성평등성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가 미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사례: 현재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는 해당 사례를 찾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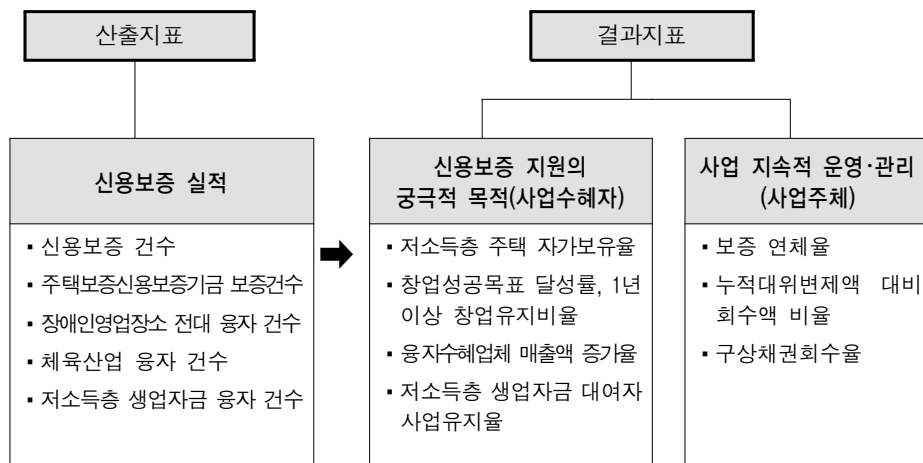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시설확충·개선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찾을 수 없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평등 관련 쟁점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시설확충·개선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로서 주로 공정율을 활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나 만족도 등의 결과 중심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향후 시설확충이나 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사후 평가가 활성화된다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분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타. 신용·융자 사업

신용·융자 사업은 개인 또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대위변제), 특정 정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시장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이차 보전 또는 투자·융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주요 활동으로서는 대학학자금 대부, 산재근로자 정착금 및 대학학자금,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생활 안정자금 대부 및 체불생계비 대부를 포함한다.

사업의 예시로서는 고용노동부의 신용보증 대위변제, 기획재정부의 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를 들 수 있다.

신용·융자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통상적으로 사업담당 부처에서 제시하는 신용보증 재원액은 적절한 지표로 볼 수 없다. 건수나 대출액 등의 투입지표에서 벗어나 사업목적 중심의 결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신용 제공이나 융자를 해주는 목적을 반영하는 결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목적 중심의 결과지표에 추가하여 신용보증의 경우는 재무적 관점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연체율, 구상채권회수율 등이 그 예이다.



[그림 IV-12] 신용·융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신용·융자 사업의 경우 개인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수혜의 양성평등성 판단이 비교적 용이하다. 특히 사업대상의 자격 요건이 명확한 경우 사업대상자 대비 실제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사업 수혜금액도 파악이 용이하므로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는 것이 용이한 사업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신용·융자 사업의 경우 결과지표는 신용 또는 융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반영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결과지표가 개발되어 있고 성별 분리 통계가 있다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분석도 비교적 용이하다.

3) 사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의 목적은 장기간의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 몰입도 제고를 이루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책대상은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에 수강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이다. 성평등 목표 분야는 여성인력활용,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이다.

사업대상자는 2011년에는 5,865명이며 여성 비율이 45.7%, 남성 비율이 54.3%이다. 사업대상자는 1개월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수강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로서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수혜자도 동일한 숫자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업대상 모집단을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대상자를 제시하지 않고 실제 사업수혜자를 사업대상 모집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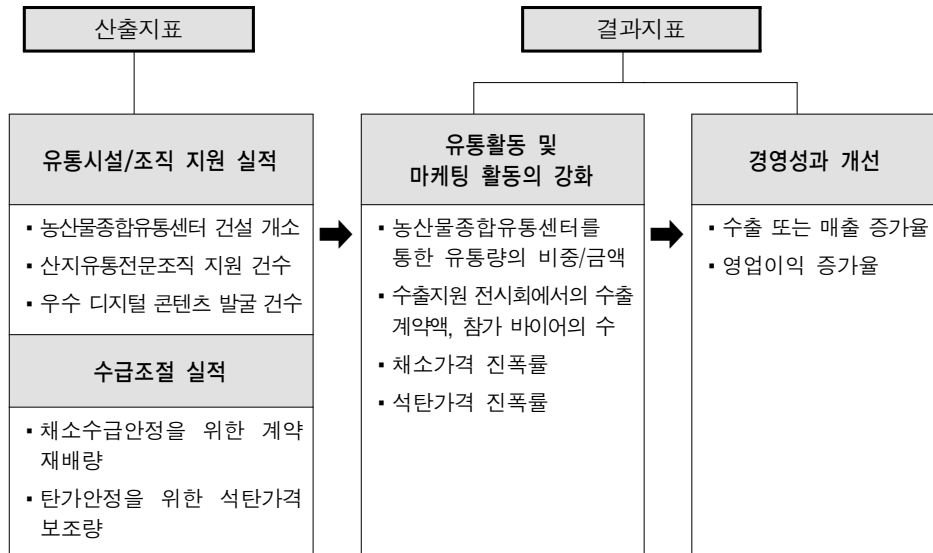
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예산 제약이 있는데 사업대상자를 100%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수혜금액 비율로 보면 여성이 46%, 남성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서에 제시된 숫자만으로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에 대해 판단을 하기 어렵다.

성과지표는 여성 실업자 훈련 참여율을 제시하고 2011년 여성 수혜비율 46%에서 1%p 상향된 47%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 실업자 훈련 참여율은 전체 훈련 참여 실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6%라는 것이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기의 지표와 목표치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동시에 생계비 대부도 받는 인구의 비율이 보다 의미 있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동 용자사업의 결과지표는 용자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은 참여자 중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은 사람의 비율이 보다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된다. 특히 용자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용자가 제공된 경우 더욱 직업 훈련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하여 취업 성과가 양호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상기의 성과가 성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파. 유통·마케팅 사업

유통·마케팅 사업은 유통과정 및 마케팅 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 넓게 보면 유통센터 건설이나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별도 유통센터 건설 및 지원, 유통협약 명령으로 과잉생산, 가격 폭락 등 수급불안 대응,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 유통정보 생산, 해외 전시회 참가, 사이버 전시 상담, 해외 IT 지원센터 운영, 수출상담센터 운영 등이 있다. 부처 사업의 예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 출하 조절, 농산물 유통개선,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식경제부의 세계일류 상품 마케팅 지원, IT기업 해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



[그림 Ⅳ-13] 유통·마케팅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유통·마케팅 사업의 경우 개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는 비교적 용이하게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지원 또는 시설이나 행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모집단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단순 수혜 성비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성을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능한 지원 대상자의 성비를 기준선으로 파악하고 실제 지원 대상자들의 성비를 비교 분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유통·마케팅 사업의 경우 유통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은 가격 안정과 해외 시장을 포함한 시장 진출 원활화에 있다. 그러므로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이러한 결과들이 성별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격 안정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특정 성과 관계없이 특정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이 있으므로 양성평등성을 분석하는 의미가 미약하다.

반면에 시장 진출의 원활화를 지원하여 매출액이나 수출액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성과가 기업주의 성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점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과연 사업 내용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성평등성 분석의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3) 사례: 현재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는 해당 사례를 찾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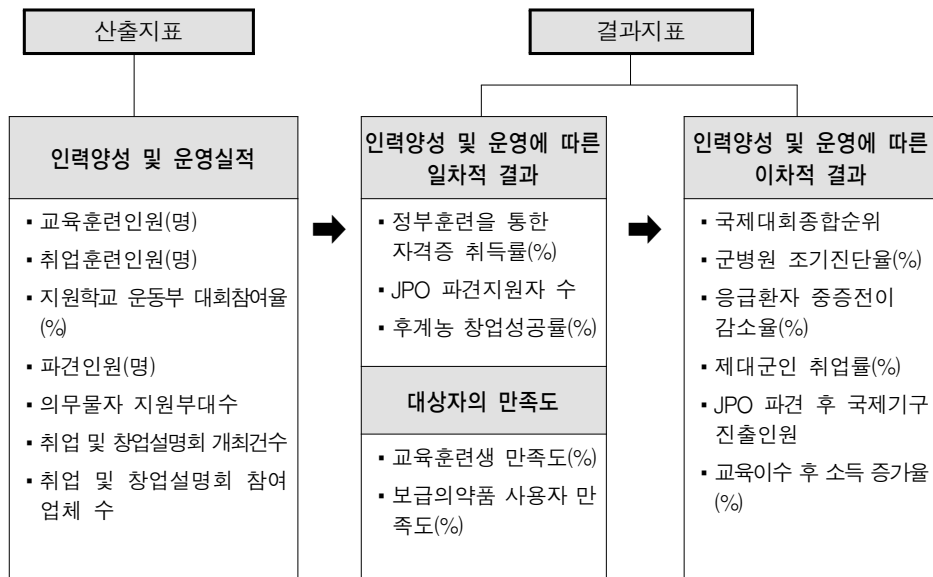
하. 인력양성·운영·활용 사업

인력양성·운영·활용 사업은 특정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지칭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 국가대표선수, 군인, 경찰 등의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자 지원 사업이 있다.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장학제도, 연구지원, 경영컨설팅 활동 지원, 기술향상지원 등의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사업의 주요 활동은 방위전력 유지(급식, 피복, 의무 물자 지원 등), 충원 활동, 국가대표 육성, 특정 분야 우수 인력양성 등이 있다. 구체적인 부처 사업의 예로는 병무청의 충원활동의 효율성 제고, 국방부의 의무물자 지원, 소방방재청의 자율소방활동 강화, 특허청의 발명인력양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대표선수 지원 등이 있다.

인력양성·운영·활용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력양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단순 투입이나 산출지표보다는 인력 운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인력양성사업으로 배출된 자

격을 갖춘 인력의 수, 혹은 양성된 인력이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실적 등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의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는 행정 서비스 측면을 평가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만족도를 포함한 일차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성숙된 사업의 경우에는 인력양성 및 운영에 따른 궁극적인 결과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Ⅳ-14] 인력양성·운영·활용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인력양성·운영·활용 사업의 경우 개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가 많으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모집단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단순 수혜 성비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성을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능한 지원 대상자의 성비를 기준선으로 파악하고 실제 지원 대상자들의 성비를 비교 분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인력양성·운영·활용 사업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특정 업무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이러한 결과들이 성별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면 동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서비스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동 사업의 목적은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 능력 강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동시에 ‘잡 매칭’(job matching)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정책대상은 문화콘텐츠 산업계 전문인력 및 예비인력이다. 성평등 목표 분야는 여성인력 활용,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문화 및 과학기술분야 여성전문인력 육성이다.

사업대상자는 2011년에 전체 575,368명이며 여성 비율은 42%, 남성은 5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수혜자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수혜자 14,650명 중 여성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수혜금액 기준으로는 여성이 33%의 수혜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이 동일하여 수혜자수와 수혜금액이 비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지표는 여성 참여 비율로 설정하고 목표치는 전년도 추정 실적치와 동일하게 33%로 설정하고 있다.

이상의 성인지예산서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집단 설정 기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를 근거로 문화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전체를 모집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추정은 되지만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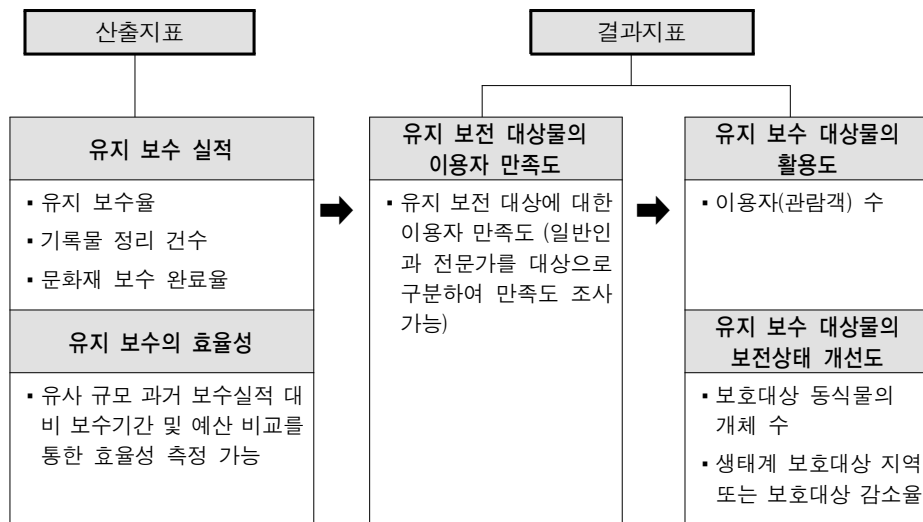
곤란하다. 모집단 중에서 실제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모집단의 42%인 여성 중에서 실제 수혜자는 왜 3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없다. 목표치 설정 근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사업수혜자 성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러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결과의 양성평등성에 대한 점검도 전혀 없다. 만약 취업이 중요한 목표라면 취업 성과의 성별 차이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거. 자원유지보전 사업

자원유지보전 사업은 국가기록물, 문화재, 산림자원, 생태계 등의 유지, 보수, 보전, 보존 활동과 관계된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활동은 국가주요기록물 수집·보존·관리, 국립공원 내 생태계 보전, 구조관리체계 구축, 지정 지구 정비 등 보존사업, 자생식물단지 조성 등이 있다. 부처별 사업의 예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환경부의 국립공원관리,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정비, 궁능원 보수 정비, 산림청의 산림자원보전관리 등이 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관리대상의 활용정도를 반영하는 이용자나 관람자 수를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보호대상의 개체 수 등 보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전체 관리 대상 중 현재 관리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과정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림 IV-15] 자원유지보전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자원유지보전 사업의 경우 보호와 보전의 가치가 있는 특정 지역, 문화재, 동식물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양성평등성을 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보호 및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선호가 성별로 다를 경우에는 양성평등성을 논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성에 대해 중립적인 자원이 대부분이므로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자원유지보전 사업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특정 자원을 보호 및 보전하여 그 자체의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문화적 가치나 생태계의 다양성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분석하기는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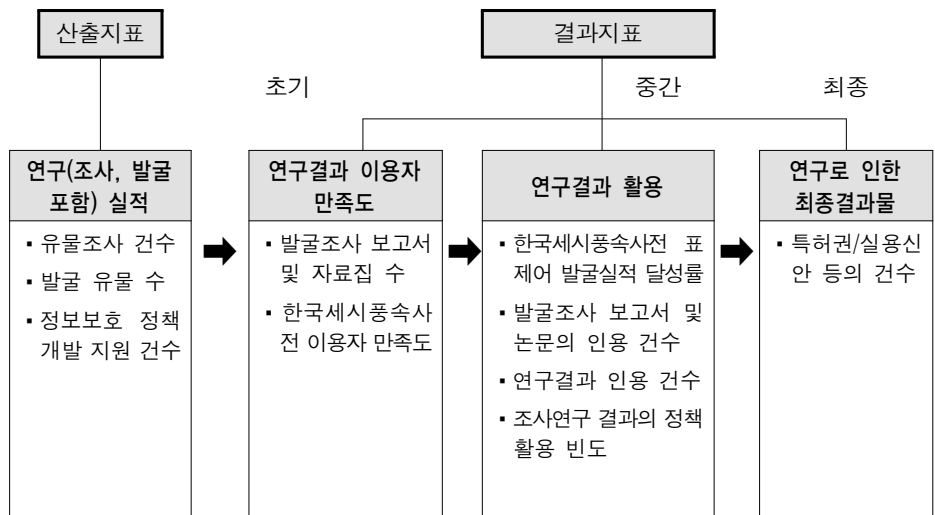
이하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보호된 문화시설 등에 대해 만족도나 활용도를 조사하고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특정 자원에 대해 성별 선호도가 뚜렷이 다르지 않다면 굳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논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사례: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는 해당 사업이 없음

나. 정책 연구용역 사업

정책 연구용역 사업은 연구개발 및 정책연구 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용역비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사업 활동은 연구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연구조사 지원, 학술행사 개최 등이다. 부처 사업 예시로는 문화재청의 문화유적 발굴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민족 생활문화 연구, 지식경제부의 정보보호 기반구축 사업, 지식경제부의 KS 국제규격 부합화 사업 등이 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실적을 산출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성과를 나타내는 논문 수 및 인용 건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건수 등을 결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물발굴의 경우 발굴 유물 수에 추가하여 발굴된 유물로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를 반영하는 연구 성과(논문 및 저술 등)를 결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연구 사업의 경우는 연구 결과물이 정책에 활용된 정도를 결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IV-16] 정책 연구용역·연구사업 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정책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개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진에게 연구용역이 발주되거나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분석하는 것이 부적절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분야의 소수 전문가에게 국한되어 발주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성평등성보다는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으므로 양성평등 관점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정책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나 정책 연구용역의 성과가 구체적인 연구개발물이나 정책으로 생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성의 점검은 이러한 결과물들이 연구진의 성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점검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지원이나 정책 연구용역은 일정 조건 하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사업 방식이나 서비스의 내용 때문에 사업성과의 성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동 사업의 경우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은 정책적 의의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3)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개발-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동 사업의 목적은 양성평등 가치가 문화 분야의 본질적 요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책대상은 여성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 관련 단체이다. 성평등 목표 분야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평등문화 확산,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이다.

사업대상자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로서 2011년 기준으로 각 70,766명, 4,747기관이다. 사업수혜자는 2011년 기준으로 기초연구조사에 참여한 인원 3,000명, 여성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원한 단체 8개소이다. 수혜금액도 성별 구분없이 총 예산액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사업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해 성별구분을 따지지 않는 것은 동 사업이 여정사업이기 때문이다. 즉 사업목표 자체가 양성평등성 제고이므로 실제 사업수혜자의 양성평등성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일반 예산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관점에서 본다면 동 사업도 동일하게 수혜자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여지가 있다. 동 사업의 수혜를 받아 콘텐츠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성비를 점검할 수 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양성평등 문화 활동 사업지원 개소 수로 설정하여 6개 단체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목표치 설정 근거는 예산액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단체별로 정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금액을 단체당 지원 금액으로 나누어서 도출한 목표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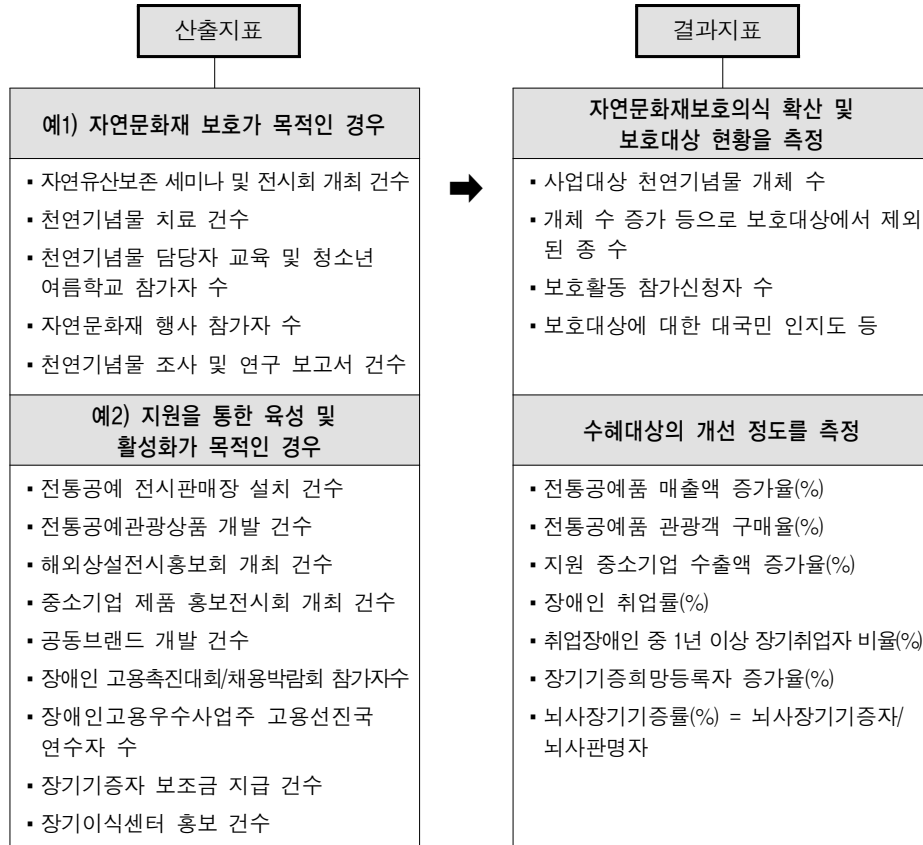
동 사업이 양성평등 정책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결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화관광 관련 콘

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지원 단체들이 창출한 콘텐츠의 수효와 콘텐츠의 활용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표는 단순히 예산액에 비례한 지원 단체 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를 전혀 판단할 수 없다.

다. 종합 사업

종합 사업은 산업육성, 문화재 보호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연구, 조사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본 사업유형의 특징은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의 자연문화재보호사업의 경우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및 치료경비 지원, 천연기념물 담당자 교육 및 청소년 여름학교 운영, 자연문화재 행사지원, 천연기념물 조사·연구 등 거의 모든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다른 부처의 사업 예시를 보면 고용노동부의 취업알선관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판로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예산업육성, 국토해양부의 원양어업기반구축 등이 있다.

동 사업유형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개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보호활동을 통한 보호 개체의 개체 수 증가율을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일한 사업목적에 대해 다양한 사업유형이 추진되는 경우 최종 사업목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결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Ⅳ-17] 종합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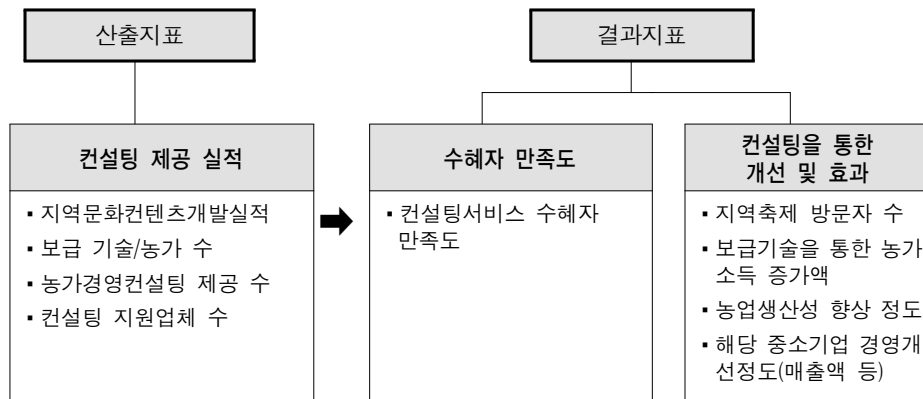
동 사업유형은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 단위에는 적용이 곤란한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서에는 세부사업 수준의 사업들이 포함되므로 종합적인 사업수단이 포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 동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찾을 수 없다.

러.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은 지자체, 중소기업, 농가 등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사업의 주

요 활동으로서는 지역문화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종합 컨설팅, 새기술 보급 및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 대상 농가별 집중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임업기술지도 보급 등이 있다. 부처별 사업 예시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농촌진흥청의 농가경영컨설팅, 중소기업청의 지식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개별 컨설팅을 통한 개선 및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경영 컨설팅의 경우 해당 기업체의 경영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의 경우는 해당 기술 및 정보 전달의 신속성 및 이들의 활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림 IV-18]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의 경우 개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다. 기업이나 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업주나 가구주의 성을 기준으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컨설팅 제공 및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함으로써 가능하다. 컨설팅의 목적이 중소기업 경영개선이라면 실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는지를 매출액이나 수익성 등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한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영상태 개선이 기업주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상태의 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기업이나 기업주의 특성, 그리고 외부 경제적 요인 등을 적절히 고려한 이후에도 기업주의 성별에 따라 경영 개선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가 가용되어야 하며 정책당국자의 분석 역량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사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 경영컨설팅』

동 사업의 목적은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책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 농업법인, 유통조직 및 마케팅 조직이며, 성평등 목표 분야는 여성인력의 활용,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 경제인 육성이다.

사업대상자는 총 1,194,715명이며 여성의 비율이 18.4%, 남성 비율이 81.6% 이다. 사업수혜자는 2011년 기준으로 1,215명이며 여성 비율이 9%를 차지하고 있다. 수혜금액도 사업수혜자와 동일하게 여성이 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여성 참여비율이고 10%로 설정되어 있다. 이 기준 설정 근거는 최근 3년간 실적 9%에서 1%p 상향조정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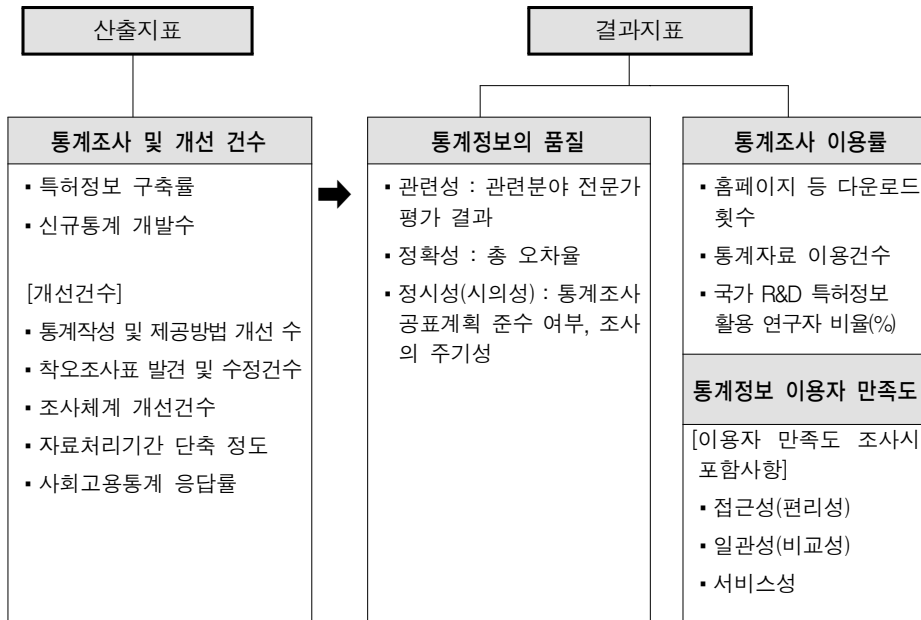
이상의 설명에서 의문점은 사업대상자의 파악 기준이다. 실제 경영컨설팅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제시한 것인지, 농업 종사자 일반을

제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실제 사업 지원 조건에 부합한 대상자 수를 제시한 것이라면, 대상자의 여성 비율인 18.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게 여성에게 지원되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머.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은 명칭 그대로 통계자료 조사 및 통계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부처별 사업 예시를 보면 통계청의 농림어업 총조사 준비 및 결과 제공, 국토해양부의 수산통계 제공, 특허청의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등이 있다.

동 사업유형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의 성과지표로는 통계의 품질, 통계의 이용 정도, 이용자 만족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 품질과 관련된 지표를 제시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한 통계를 생산하는지, 통계 수치가 정확한지, 계획된 일정을 준수하여 자료가 공표되는지 등이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통계자료에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통계자료의 시계열적, 횡단면적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미시통계자료가 제공되는지, 데이터의 전환 및 가공이 용이한지 등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계자료 생산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Ⅳ-19]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의 경우 개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계자료 개발 및 작성 자체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다만 통계자료 생산에 참여하는 인력이나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성별 비율을 점검할 여지는 있다. 과도하게 특정 성의 인력이나 기업주가 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여지는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자격을 가진 인력이나 기업이 선택의 여지가 있도록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만 한다. 만약 인력이나 사업자의 선택 여지가 미약하다면 성별 비율을 점검할 필요가 약하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사업의 경우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분석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어떤 통계자료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성별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성별 분리 통계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를 할 수는 있다. 반면에 일단 통계 자료의 종류가 선택되고 개발되고 난 이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적 분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결과물의 활용도가 중요한 결과지표의 하나이므로 활용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의 경우 대부분이 가치중립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도 자체에 대해 양성평등적 시각에서의 분석은 의미가 미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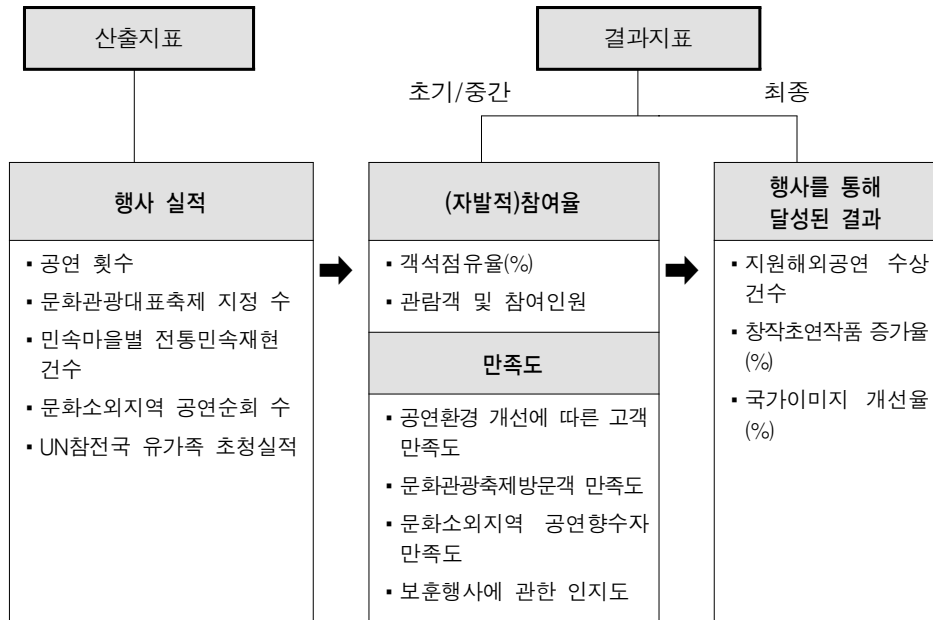
3) 사례: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는 해당 유형의 사업이 없음

버. 행사 사업

행사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 국내외 문화 및 관광 행사, 체육행사, 전시 박람회 등의 행사 추진사업이다. 부처별 사업 예시로는 국가보훈처의 보훈기념행사 개최, 소방방재청의 방재의 날 행사, 고용노동부의 채용박람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엔날레 개최 등이 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행사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참여자의 규모 측면을 제시하는 성과지표도 의미가 있으며 일회성 행사인 경우 참여자의 만족도 또한 의미 있는 성과지표이다.

그러나 행사 개최 자체에 대한 지표보다는 행사 개최의 궁극적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개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20] 행사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행사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은 행사 참가자의 성비를 점검하는 것을 통해 일차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가를 전제로 한 행사인 경우, 개인의 선호에 따라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성비를 분석하는 의미가 미약하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행사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는 것도 용이하지는 않다. 다만 행사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가능하다. 만약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면 행사 내용에 성에 근거한 차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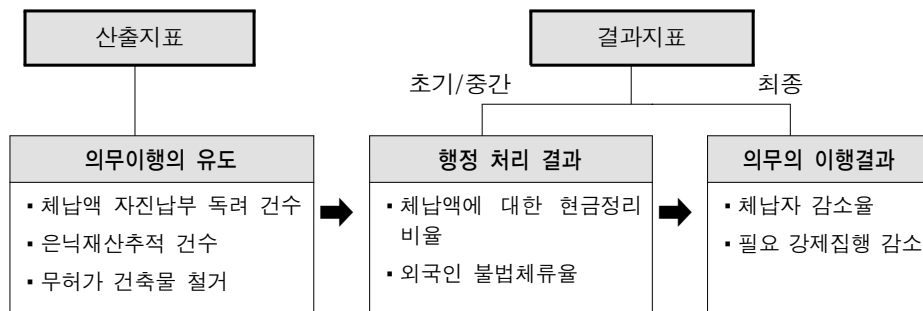
요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사례: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 해당 사업이 없음

서. 행정집행 사업

행정집행은 강제적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활동은 행정상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처별 사업 예시를 보면 국세청의 압류재산공매사업, 관세청의 관세탈루심사 지원, 법무부의 보호관찰, 외국인 체류관리 등이다.

동 사업유형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행정집행이 이루어져 의도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강제적 행정집행 사업에서 체납자 감소, 불법체류 감소 등이 궁극적 결과이고 일차적인 성과는 체납세금 정리액, 불법체류자 검거율 등이다. 일차적인 성과는 주로 산출지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지표와 더불어 강제집행 과정의 공정성이나 인권보호 차원의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림 IV-21] 행정집행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행정집행 사업의 수혜의 양성평등성은 특정 성에 대해 집중하여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체납자 중에서 특정 성에 대한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행정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행정집행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체납 징수 실적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체납자 비율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일차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행정집행 사업의 분석의 핵심은 행정집행이 성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사례: 법무부 『보호관찰 활동』

보호관찰 활동의 사업목적은 범법자 중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 관찰 실시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대상은 보호관찰 대상자이며 성평등 목표 분야는 여성 권익 보호,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제도 개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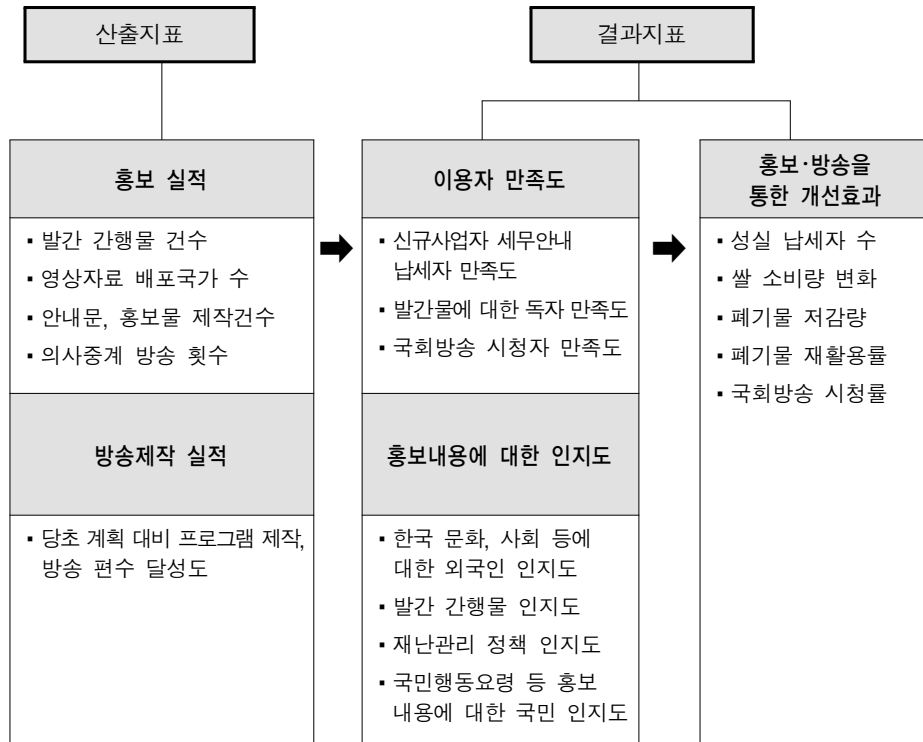
사업대상자는 2011년 기준으로 79,413명이며 여성이 11.5%, 남성이 88.5%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수혜자도 사업대상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업대상자이자 수혜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수혜 예산액도 사람 수에 비례하여 기술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재범률로서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7.3%로 기술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보호관찰 활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성별 재범률을 검토하여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 만약 성별로 차이가 있다면 보호관찰 활동 방식이나 내용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어. 홍보·방송 사업

홍보·방송 사업은 단순 정보전달이나 이미지 제고 등 특정 목적을 위한 홍보 활동과 방송제작, 지원, 운영 등 방송 산업 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사업의 주요 활동은 정기간행물 발행, 영상자료 배포, 재난관리정책 홍보, 지하철 재난예방 홍보, 쌀소비촉진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이다. 부처별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다. 외교통상부의 출판자료 지원사업, 소방방재청의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국세청의 납세 안내 및 세정홍보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소비 촉진 홍보사업, 환경부의 폐기물 감량홍보 및 지원사업이 있다.

동 사업유형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홍보사업은 정보전달 자체가 목적인 경우와 전달된 정보를 통해 인식 및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나 구독자 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를 별도로 측정하거나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통계자료 활용을 통하여 결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보 목적의 방송 사업일 경우 방송된 산출물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청자 만족도나 해당 방송의 시청률 등이 그 예이다.



[그림 Ⅳ-22] 홍보·방송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홍보·방송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은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측정이 곤란하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홍보·방송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홍보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성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홍보 방식이나 내용이 특정 성에 효과적으

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동일한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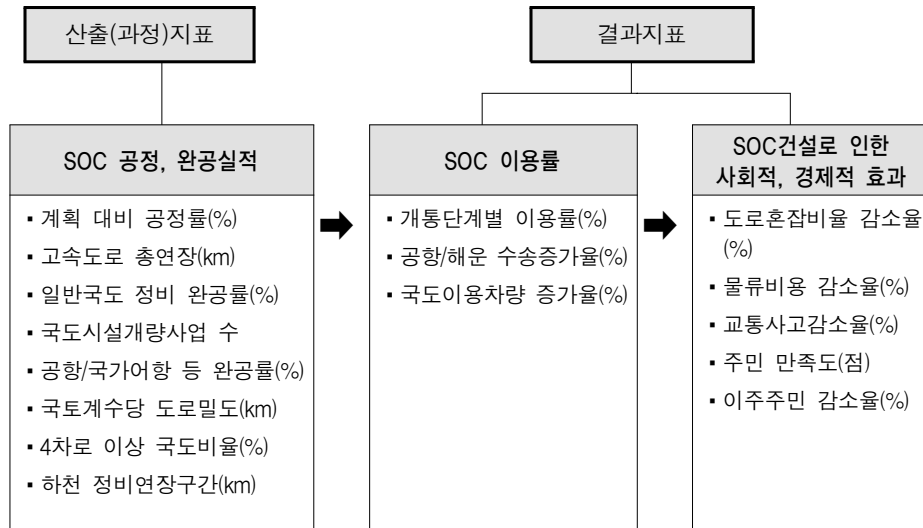
3) 사례: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 해당 사업이 없음

저. SOC 사업

SOC 사업은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업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토목·건축 사업으로 연차별 소요 등 사업 내용이 사전에 구체화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활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목 및 건설 공사이다. 부처별 사업의 예시는 국토해양부의 주요 고속도로 건설, 주요 항만 개발, 서울 지하철 건설, 국방부의 국방의료원 건립 등이다.

동 사업유형의 성과지표 개발 원리는 다음과 같다. SOC 사업의 성과지표는 실제 건설 결과물, 서비스 조달 결과, 사용자가 느끼는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다. 사업결과의 가시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과정지표(공정율, EVM 방식의 공정율 관리가 바람직함)의 사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과정지표를 활용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일부 완료되어 활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과지표를 과정지표와 함께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산출단계에서는 공정 및 완공 실적, 결과단계에서는 완공물의 조달 결과(이용실적) 및 사용자가 느끼는 서비스의 질(만족도 및 사회 경제적 효과)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Ⅳ-23] SOC 사업유형의 성과영역 및 지표유형

양성평등 관련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SOC 사업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2)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SOC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점검을 통해, 성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만족도에 대한 점검을 통해 특정 성에 불편하게 시설이 완공되었는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

3) 사례: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에 해당 사업이 없음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개별 예산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에서 새롭게 추가한 작성항목으로 성평등 목표의 달성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때 의미있는 성과정보를 도출해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심 내용이었다.

성인지예산사업의 성과지표 도출 단계는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과지표 단계(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와는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단계를 크게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과 결과의 양성평등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업수혜와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한다는 목적에서 본다면 일반 예산사업이나 여성정책 사업이 다를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여성정책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자체가 양성평등성 제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의 목적 자체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여성정책 추진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반재정 성과관리제도에서도 양성평등 자체를 정책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은 성과관리 대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성정책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이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의미가 미약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일반 재정사업 분류에 관계없이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과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예산사업을 사업수단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의 결과지표 개발 원리와 사업수혜 및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 개발 원리를 논하였다. 동시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들의 목표치 설정 기준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관련 지표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는 사업대상 모집단의 성비일 것이다. 즉 사업대상 모집단의 성비와 사업수혜자의 성비가 일치하는 것이 양성평등한 상태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목표치에서 이탈했을 경우, 그 이탈 이유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 목표치에서의 이탈이 사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별 선호(수요)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인지, 양성불평등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된 선호(수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준 목표치에서의 이탈이 기계적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는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기준은 성별로 사업결과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 목표치를 바탕으로 만약 이탈이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사업을 2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사업수혜 및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지침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표 V-1> 참조). 향후에는 이를 활용하여 성인지예산서의 성과정보가 해당 사업의 사업수혜와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표 V-1〉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지침 및 사례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1	검사·인증·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따라서는 검사(심사), 인증, 조사, 연구에의 성별 참여 비율 파악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 추가적으로 사업 참여자나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차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의 활용도와 활용을 통한 결과의 성별 차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2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 참여자의 성비를 일차적인 지표로 활용할 필요 있음 - 협력사업의 수혜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지원 이루어진다면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점검 불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성격이 일회성 이벤트일 경우, 별도의 결과지표 설정 불필요함. 반복적인 성격의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목표로 할 경우, 결과지표 설정하고 결과지표의 성별 차이 점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적인 지표: 사업 수혜자 성비, 수혜금액의 성비 ▪ 결과지표: 연구 결과물의 향상 정도의 성별 차이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자의 성별 만족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 활용할 필요 있음 	할 필요 있음	
3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참여자의 성비를 일차적인 지표로 활용할 필요 있음 - 교육·훈련사업 수혜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혜금액의 양성평등성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 없음 - 사업참여자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 활용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통해 참여자들에게 가져오고자 하는 변화 정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할 필요 있음 	법무부 『교정 교화』 ▪ 초기 결과지표로는 교정교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하는 지표 활용 가능함. 궁극적인 결과지표로서는 재범률의 성별 차이 점검하는 지표 활용 가능함
4	구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 사업이 아니므로 수혜자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어려움. 다만 구매물품 공급자의 성비를 사업수혜 지표로 활용할 여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결과지표로 구매 물품이나 장비의 사용자 만족도나 활용률의 성별 차이 점검을 활용할 수 있음. 궁극적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점검은 대다수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국토해양부 『저상버스도입보조』 ▪ 수혜를 받는 교통 약자 중 성비, 활용도나 만족도의 성별 차이 점검을 통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파악이 가능함
5	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자체의 수혜자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곤란함. 다만 구조개선 사업 중 인력 감축, 조정 계획이 포함된 경우, 인력 감축 대상의 성비 점검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이나 분야가 사업의 단위이므로 사업결과를 성별로 분리하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함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6	기관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개별 수혜자의 양성평등성 및 사업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의 점검 의미가 미약함 - 다만 양성평등 정책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음 - 기관이 국민에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적인 결과지표: 기관 이용자 만족도의 성별 차이 점검할 수 있음 - 궁극적인 결과지표: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성별 차이가 점검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수혜의 성별 비율, 교육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할 필요 있음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제공하는 기능 수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성별 차이나 만족도 차이 점검이 가능함		
7	대민 서비스 제공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업수혜 양성평등성 점검이 비교적 용이함. 수혜자 성비,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점검이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차적인 결과지표: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받은 수혜자의 만족도 성별 차이를 점검 - 궁극적인 결과지표: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점검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수혜대상자를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노인계층, 도우미로 취업하고자 하는 계층으로 나누어 분명히 제시할 필요 있음.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과 사업수혜 결과의 양성평등성도 별도로 분리하여 점검해야 함
8	방지·예방·단속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혜자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용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음.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도 동일한 문제를 가짐 - 사업의 효과가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착되는 것인지, 특정 지역, 집단, 국민전체에게 무차별적으로 귀착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지·예방·단속의 효과 보여주는 지표가 결과지표임 -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 점검이 사업에 따라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 (환경오염 예방사업 등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이 어려운 경우) 	법무부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특정 성 차별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 미약함
9	보상금·보조금 (인센티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해석에 주의 필요함. 사업수혜 대상자 파악 시, 사업수혜 조건에 부합하는 모집단 파악이 필수적임. 수혜금액의 경우 지급 금액의 결정 조건에 양성평등 저해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정도, 서비스 제공의 성별 차이 점검이 필요함. 보상금의 경우 보상금 수혜자 만족도의 성별 차이 점검이 필요함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부 피해자의 만족도는 일차적인 결과지표로서 의미는 있음.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수준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10	사회보장 보조 및 기타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 양성평등성 해석에 주의 필요함. 사업수혜 대상자 파악 시, 사업수혜 조건에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정도, 서비스 제공의 성별 차이 점검 필요함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연금이 고령인구의 성별 경제수준 격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하는 모집단 파악이 필수적임. 수혜금액의 경우 지급 금액의 결정 조건에 양성평등 저해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야 함		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 개발, 분석이 필요함
11	시설확충·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 집단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의 확충·개선 사업이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판단이 어려움 - 그러나 시설 활용도, 시설 사용 편의성, 시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등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점검 가능함. 시설 활용도를 사업수혜로 본다면 시설 활용도의 성별 차이 점검은 가능함. 그리고 시설 사용 만족도의 성별 차이도 점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이용도와 만족도의 성별 차이 점검 가능함 - 교통사고 감소율과 같은 궁극적인 결과의 양성평등성 점검도 가능함 - 하지만 불특정 다수 국민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궁극적 결과의 양성평등성 점검의 실익이 미약함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12	신용·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혜택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판단이 비교적 용이함. 수혜자 성비,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 점검이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또는 용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반영하는 적절한 결과지표가 개발되어 있고 성별 분리 통계가 있다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분석이 비교적 용이함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 제공된 경우 직업 훈련 받은 참여자의 취업 성과의 성별 차이 점검이 필요함
13	유통·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용이함. 단, 가능한 지원 대상자의 성비를 기준선으로 파악하고 실제 지원 대상자들의 성비를 비교 분석 해야 함 -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지원 또는 시설이나 행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의 경우,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수출액 증대 도모하는 사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익률 증가 성과가 기업주의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점검 가능함 -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사업내용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검증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성평등성 분석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14	인력양성·운영·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용이함. 단, 가능한 지원 대상자의 성비를 기준선으로 파악하고 실제 지원 대상자들의 성비를 비교 분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인력 양성하여 특정 업무, 분야에서 두각 드러내고 성과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성별 차이 점검이 필요함 	<p>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업수혜자 성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결과의 양성평등성에 대한 점검도 전혀 없음 ▪ 취업이 중요한 목표라면 취업 성과의 성별 차이 분석도 필요함
15	자원유지보전 (문화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사업에서 성에 대해 중립적인 자원이 대부분이므로 수혜의 양성평등성 논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된 문화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나 활용도의 성별 차이 점검 가능하나, 특정 자원에 대한 성별 선호도가 다르지 않다면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을 논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음 	<p>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p>
16	정책연구용역 및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지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가능함 - 그러나 다수의 연구진에게 연구용역이 발주되거나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혜의 양성평등성 분석은 부적절할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연구진의 성별 차이 점검할 수는 있음 - 그러나 본 사업유형은 일정조건 하에 재정적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사업 방식, 서비스 내용 때문에 사업성과의 성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곤란함. 따라서 사업결과의 양성평등성 점검은 정책적 의의 미약함 	<p>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개발-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성비를 점검할 수 있음 ▪ 현행 지표를 통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를 전혀 판단할 수 없음. 지원 단체들이 창출한 콘텐츠의 수효와 활용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
17	종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 단위에는 적용 곤란한 유형임. 성인지예산서에는 세부사업 수준의 사업이 포함되므로 종합적인 사업수단이 포괄적으로 추진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 단위에는 적용 곤란한 유형임. 성인지예산서에는 세부사업 수준의 사업이 포함되므로 종합적인 사업수단이 포괄적으로 	<p>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음</p>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는 사업은 없다고 판단 되기 때문임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 고 판단되기 때문임	
18	컨설팅 제공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지원 이루어 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가능함 - 기업이나 가구 지원의 경우에도 기업주나 가 구주의 성을 기준으로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태 개선(매출액, 수익성 등)이 기업주의 성별에 따라 차이 있는 지 점검 가능함. 단, 기 업, 기업주의 특성, 외 부 경제적 요인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점검 해야 함 	<p>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 경영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파악 기 준이 분명하지 않음. 실제 경영컨설팅 지 원 대상 조건에 부합 하는 인원을 제시한 것인지, 농업 종사자 일반을 제시한 것인 지 분명하지 않음 ▪ 사업결과에 대한 점 검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9	통계자료 조사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게 지원 이루어지 지 않고 통계자료 개발 및 작성 자체에 초점을 두므로 수혜의 양성평 등성 점검이 어려움 - 다만 통계자료 생산 인 력이나 사업자가 다수 인 경우 성별 비율 점검 할 여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물 활용도의 성별 차이를 점검할 수 는 있음. 그러나 통계 자료의 경우 대부분 가 치중립적이므로 양성 평등성 분석의 의미 미 약함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 서 찾아볼 수 없음
20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은 행사 참가자의 성비 점검을 통해 일차적으 로 가능함. 그러나 자발 적인 참가를 전제로 한 행사의 경우, 성비 분석 의 의미 미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물의 양성평등 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 음. 다만 행사 참가자 만족도의 성별 차이 점 검은 가능함 	현재 성인지예·결산서에 서 찾아볼 수 없음
21	행정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성에 대해 집중하여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징수 실적, 체납 자 비율의 성별 차이 점검함으로써 사업결 과의 양성평등성에 대 한 일차적 판단 가능 함. 행정집행이 성 중 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점검하는 것이 사업 분석의 핵심임 	<p>법무부 『보호관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범률은 보호관찰활동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 로서 바람직함. 다만 성별 재범률을 검토 하여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점검 필요함
22	홍보·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내용에 대한 인지 도의 성별 차이, 홍보 	현재 성인지예·결산서 에서 찾아볼 수 없음

번호	사업유형	사업수혜	사업결과	사 례
		아니므로 사업수혜의 양 성평등성 측정이 곤란함	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의 성별 차이 점검 가능함	
23	SOC	-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수혜의 양 성평등성 판단 어려움	-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점검 을 통해 성별 만족도의 차이 점검 가능함	현재 성인지예·결산서 에서 찾아볼 수 없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 _____ (2011),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 기획재정부(2012),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2012a),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일반재정사업 성과지표 사례집 - 』.
- _____ (2012b),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현장에서 통하는 성과지표 개발 - 』.
- 김영숙 외(2011),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10a),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 _____ (2010b),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_____ (2011a),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 _____ (2011b),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박노옥·나원영(2008),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 지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국외문헌

- Stotsky, Janet(2006), “Gender Budgetin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2012 연구보고서 8-2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I)』의 단위 연구보고서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

2012년 12월 29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519-0 94330

978-89-8491-516-9 94330 (세트)

<정가 12,000 원>